

핵을 넘어 평화로 : 히로시마와 후쿠시마의 메시지

- 일시 | 2016년 6월 14일 (화) 2시-6시
-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최 |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프로그램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2016 심포지엄

핵을 넘어 평화로 : 히로시마와 후쿠시마의 메시지

13:30	접 수	
14:00	개 회	
14:05	여는 말	김형기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
14:10	기조발제	동북아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변화 홍사덕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
14:30	사 회	최완규 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원장
14:35	세션 1	북한의 핵위협과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발표	북한의 핵위협과 핵안보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장
	발표	한반도 비핵평화체제는 가능한가? 박영호 강원대학교 초빙 교수, 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16:05	휴 식	

16:20	세	선 2	한중일 원전과 탈원전 발전모델
	발표	‘포스트 후쿠시마’의 일본사회와 시민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발표	탈원전 지속가능발전모델은 가능한가?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토론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17:55	닫는 말	법륜스님 평화재단 이사장	
18:00	폐 회		

차례

05	모시는 글
06	약력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09	발표 1 북한의 핵위협과 핵안보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장
29	발표 2 한반도 비핵평화체제는 가능한가? 박영호 강원대학교 초빙 교수. 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9	토론 1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55	토론 2 이해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57	발표 3 ‘포스트 후쿠시마’의 일본사회와 시민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81	발표 4 탈원전 지속가능발전모델은 가능한가?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101	토론 3 이문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109	토론 4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모시는 글

주지하다시피 동북아는 핵문제와 관련된 아픈 역사를 지닌 지구상의 유일한 지역입니다.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투하되었으며, 최근에는 후쿠시마에서 초유의 대규모 원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에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으며, 핵과 인류의 평화와 안전의 함수관계에 심각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와 후쿠시마의 사례는 인류 문명사에서 핵이 가지는 어두운 두 얼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공할 핵무기의 사용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따르는 재앙의 위험성이 그것입니다.

금년 벽두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사상 최강의 대북제재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핵 위기는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번 7차 당대회에서 4차 핵실험을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이라고 자평하는가 하면, ‘경제·핵 병진노선’을 항구적인 전략적 노선이라며 핵보유국임을 선언했습니다. 다른 한편 한중일 세 국가에는 세계 어느 곳보다 원전이 밀집되어 있어 그만큼 위험지수도 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동북아에는 이 두 현실이 함께 얹히면서 위협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핵안보와 핵안전이 우리의 절실한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에서는 고조되고 있는 북핵 위기의 실체와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고, 원전 가동에 수반되는 위험성을 성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핵을 주제로 우리의 안보와 안전문제를 되짚어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6월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약력



사회 최 완 규

현 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원장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기조발제 홍 사 덕

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겨레의 숲 상임대표
전 제18대 국회의원 (6선)
한나라당 원내대표



발표 이 수 석

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전 한국정치학회 및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



발표 박 영 호

현 강원대학교 초빙 교수
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
한국세계지역학회 회장
비교민주주의학회 회장



발표 남 기 정

현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전 일본 도호쿠대학 법학연구과 조교수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일본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객원교수



발표 김 혜 정

현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원전특위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토론 최 종 건

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외교부, 통일부, 공군 정책자문위원
한반도 평화포럼 기획위원
항공우주력학술프로그램 간사



토론 이 혜 정

현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노스웨스턴대학 정치학 박사
서울대 외교학과 학, 석사



토론 이 문 영

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전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연구교수
고려대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국민대 유라시아연구소 연구교수



토론 한 재 각

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환경/과학기술 사회학 박사
전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장

8 핵을 넘어 평화로 : 히로시마와 후쿠시마의 메시지

발표 1

북한의 핵위협과 핵안보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장

I. 머리말

북한은 2016년 1월 6일 오전 10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4차 핵실험을 실시하여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김정은이 작년 12월 10일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강대한 핵보유국”을 언급한 지 27일 만에 핵실험을 실시한 것이다.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언론은 금번 시험용 수소탄 핵실험으로 북한이 소형화된 수소탄을 지닌 최강의 핵억제력 보유국이 되었다고 계속해서 선전했다. ‘수소탄 시험 성공 자축 군중대회’가 전국에서 개최되었고, 노동신문은 연이어 “수소탄 시험은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¹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응해서 4차 핵실험의 당위성을 언급한 것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성공적인 수소탄실험이라고 자평한 것은 지난 5월초 개최된 7차 당대회 사업총화 성과와 결정문에서도 잘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당 규약에 핵무력 건설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을 항구전략으로 당 규약에 명시했다.

1 노동신문, 2016.1.10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문화한 데 이어 헌법보다 상위 규범인 당 규약에서도 ‘핵보유’가 명문화되었다. 앞으로 북한에서 누구든 비핵화를 언급하거나 시도한다면 이는 헌법위반이자 반당, 해당행위가 된다. 이제 북한에서 핵무기는 군사 전략차원이 아닌 구조적, 제도적 요인이 되었다.

소형화, 경량화 된 북핵이 실전배치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글은 먼저 4차 핵실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북한의 핵능력과 위협성을 검토하고 7차 당 대회에서 나타난 북한의 핵전략, 그리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다.

II. 4차 핵실험과 북핵의 위협성

1. 4차 핵실험의 특징

북한의 4차 핵실험은 과거 북한의 핵실험과 달리 사전통보나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실시했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당시에는 6일 전 외무성 성명, 2009년 5월 2차 핵실험 당시에는 26일전 외교부 대변인 성명,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당시에는 19일전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핵실험을 예고했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

또한 핵실험의 사전 징후였던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없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3개월 후 1차 핵실험, 발사 50일후 2차 핵실험, 발사 2개월 후 3차 핵실험을 실시한 것과 달리 4차 핵실험은 핵실험 후 1개월 후인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또한 과거 핵실험 당시 북한은 미국과 중국 등에 사전 통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4차 핵실험은 주변국에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실시했다.

〈표 1〉 북한의 과거 핵실험 비교

구분	1차('06.10.9)	2차('09.5.25)	3차('13.2.12)	4차('16.1.6)
위력	지진파 3.9 1kt 이하	지진파 4.5 2~6kt	지진파 4.9 6~7kt	지진파 4.8 6kt
결과	핵장치 수준으로 폭발위력 제한	플루토늄 핵분열 통한 핵 실험	고농축 우라늄 사용 시사	수소폭탄 실험 주장
예고 성명	6일전(외무성)	26일전 (외교부 대변인)	19일전(국방위)	없음
사전 징후	3개월전 장거리 미사일 발사	50일전 장거리 미사일 발사	2개월전 장거리 미사일 발사	16일전 SLBM 발사
의미	핵무기 제조능력 확인	핵보유 기정사실화 추진	소형화, 다종화 추진	최강의 핵억제력 주장

이는 북한이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판이나 비판들에 개의치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판단된다. 핵실험에 이은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더 이상 김정은 정권과 대화로 핵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난망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발표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북한의 기술력이나 지진파 등을 통해 나타난 폭발력을 감안할 때, 수소의 열핵융합반응을 이용한 수소폭탄으로 간주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평가되었다. 예컨대 4차 핵실험의 위력은 6kt, 지진파는 4.8(기상청 발표)로 3차 핵실험 때(위력 7kt, 지진파 4.9)와 유사해서 수소폭탄이라고 보기에는 위력과 지진파 강도가 적다. 수소폭탄 일 경우, 최소 수십 내지 수백 배 kt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폭발력 6kt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 투하 핵폭탄과 유사하다. 그리고 수소탄 실험은 직경 1~2km의 분화구가 생길 정도의 엄청난 충격이 발생하지만, 현재까지 핵실험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북한발표에서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 수소탄”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건대, 통상적인 수소폭탄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정부차원에서 밝히기도 했다.

수소폭탄보다는 위력이 적은 증폭핵분열탄 실험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증폭핵분열탄은 수소폭탄의 전단계로 원자폭탄보다 효율이 높으면서도 부피와 무게는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최종적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수소폭탄보다 위력이 작은 증폭핵분열탄 혹은 단순한 핵폭탄실험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3차 핵실험 이후 3년 만에 수소탄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수소폭탄 실험은 그 위력이 크기 때문에 지형상 한반도에서 실험하

기가 곤란하다는 점도 이런 판단에 참고가 되었다. 그러나 수소폭탄이든 증폭핵 분열탄이든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2.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위협적 발언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를 바탕으로 한 군사전력상 우위로, 대남주도권 장악 및 한국사회 내 불안심리를 이용한 통일전선전략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특히 핵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및 북핵포기 노력을 무산시키고, 한국사회 내 갈등을 획책하려는 의도가 있다. 향후 북한은 계속 핵개발능력을 강화시키려 할 것이고, 우리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이를 저지하려고 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인 2270호 통과이후 북한의 도발적 언사들을 보면, 북한의 향후 자행할 행태들이 우려스럽다. 3월 4일 김정은은 “실전 배치한(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쏘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북한의 군사적 대응방식을 선제공격 방식으로 모두 전환할 것이라고 위협했다.² 그리고 북한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도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비난하면서 “강력하고 무자비한 물리적 대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총동원될 것”이라고 하는 등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2월 23일 북한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을 통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위협적인 발언에 이어 3월 7일 국방위원회 성명에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핵타격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³

노동신문은 3월 11일 김정은의 전략군 탄도로켓 발사훈련 참관 소식을 전하면서 ‘전략군화력타격계획’이란 제목의 지도 사진을 공개했다. 그런데 이 지도에는 평양 아래 황해북도 황주군 지역부터 동해상으로 2줄의 탄도미사일 비행 궤적이 그려져 있는데, 서울과 부산, 평택 등 우리나라의 6개 주요 도시에 검은 점이 찍혀있다.⁴ 북한은 우리의 도시들을 유사시 공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4차 핵실험 이후

2 조선중앙통신, 2016.3.4

3 노동신문, 2016.3.7

4 노동신문 2016.3.11

북한은 몇 달 동안 한반도 정세를 위태롭게 하면서 한국을 핵공격 하겠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표 2〉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 발언

일시	발표 기관	발언 내용
3.4	김정은 발언	실전 배치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쏘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군사적 대응방식을 선제공격 방식으로 모두 전환할 것
3.6	외무성 대변인 담화	정세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험악한 지경에 이른 것과 관련하여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식은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되게 될 것
3.7	국방위원회 성명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핵타격전을 전개할 것
3.11	김정은 발언	핵폭발시험과 핵공격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시험들을 계속해야 하며 지상과 공중, 해상, 수중의 임의의 공간에서도 적들에게 핵 공격을 가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3.12	북한군 총참모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응해)서울을 비롯한 남조선 전지역 해방작전으로 대응할 것이며 최고사령부가 선제 타격명령만 내릴 것을 고대하고 있다
3.23	조평통 중대보도	(우리 군 훈련을 거론하며)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위협
3.25	김정은	청와대와 서울시 안의 통치기관들을 격멸 소탕하기 위한 집중화력 타격연습 지도
5.1	민주조선	ICBM과 SLBM, 그리고 전략폭격기에 의한 핵공격 등 3대 핵타격수단 중 SLBM이 가장 위력이 크며 "우리의 미국본토 공격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

3. 북한의 핵능력

(1) 핵개발 역사

일반적으로 핵개발은 대내적으로는 민족감정에 호소하여 정권의 정통성과 대중적 지지를 유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대외적으로는 다른 국가에 대해 우월한 국제 위상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 상대 라이벌 국가와의 갈등으로 인해 핵을 개발하지 않으면 대내적 지지기반을 상실하게 되므로 국제사회의 반발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권유지를 위해 핵개발을 추진한 대표적 국가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한국전이후 미국의 군사력 특히, 원자폭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북한은 핵개발을 통해 인민들의 결속과 충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1967년 민족보위성 지휘관급 회의에서 김일성이 “우리도 원자탄을 생산할 수 있다. 미국이 원자탄을 사용하면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서 잘 나타난다. 실제로 북한은 핵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오랫동안 핵 프로그램을 준비해왔다. 현재 북한 핵보유는 체제결속 및 유지, 대미협상, 대남 전략적 우위 등을 추구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으로 조직, 전문인력, 우라늄 자원, 핵연료주기 시설 등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 조직으로는 1970년대 영변 원자력연구센터 설치 및 1986년 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 원자력 총국을 조직하여 핵개발 국가조직체계를 구성했다. 전문인력은 3,000여명 정도로 파악된다. 또한 양질의 우라늄 자원의 매장량이 약 2,600만 톤, 가채량은 약 400만 톤에 이른다. 영변을 비롯한 여러 곳에 원자로, 재처리시설, 농축시설 등 핵개발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의 의혹과 압박이 심해질 때면 핵관련 협상에 임하는 등 핵폐기 의사를 보이는 한편, 비밀리에 의혹을 살만한 행동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지난 60여 년 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과 재원을 동원하여 심혈을 기울인 핵프로그램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나타낸다.

(2) 핵능력

현재 북한의 핵능력은 북한은 1986년부터 5MWe 흑연감속 원자로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1989년 3월 핵연료봉을 전면교체하여 플루토늄 10~12kg 확보, 이후 1994년 5월까지 사용한 핵연료봉 8,000여개에서 플루토늄 24~32kg 확보 등으로 총 34~44kg 플루토늄을 확보해 핵무기 6~10개 수준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2007년 2월 5MWe 흑연감속 원자로 가동 중단을 발표하였는데, 2013년 8월부터 재가동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를 통해 2015년부터 연간 플루토늄 6~8kg을 추출해 핵무기 1~2개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2009년부터 100MWe의 실험용 원자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를 완공해 운영할 경우 연간 핵무기 5~6개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원심분리형 우라늄농축 기술을 파키스탄에서 도입하였으며, 2009년 4월 우라늄농축 시설을 착공해 2010년 10월 운용하기 시작하고, 2012년부터 연간 약 30kg의 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간 핵무기 1.5~2개를 생산할 만한 양으로 그동안 핵무기 6~8개 분량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에도 핵무기 생산량을 증대시켜 나가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 제조의 소형화와 다종화를 통해 핵운용 능력을 강화시키려는 입장이다. 핵무기의 소형화는 탄도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핵탄두를 제조하기 위한 것이며, 다종화는 핵분열 방식은 물론 핵융합 방식의 핵무기를 제조하겠다는 의미이면서, 나아가 전술핵무기, 핵지뢰, 핵배낭 등 제조를 통한 다양한 무기방식을 추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핵무기 제조의 소형화와 다종화는 결국 핵실험을 통해 실현시킬 수밖에 없기에 북한은 여러 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여 제조기술을 향상시키고 있다.

(3) 핵운반 수단

북한은 핵무기 운반수단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3톤 수준의 핵탄두 투발능력이 있는 공중폭격기 IL-28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대지 또는 잠대지 탄도미사일에 의한 핵무기 투발능력 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

재 북한이 실전배치 또는 개발 중인 스커드, 노동, 무수단, 대포동 또는 KN-08 지대지 탄도미사일 등은 탄두중량이 1톤 미만이어서 그에 알맞은 소형 핵탄두 제조를 전제하고, 투발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 사정거리 300km의 스커드-B와 500km의 스커드-C를 생산하여 작전배치하였다. 스커드-B와 스커드-C 미사일은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북한 탄도미사일의 주력으로서, 스커드-B는 남한중부권까지, 스커드-C는 남해안 지역까지 사정권에 넣는다. 총 600여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을 싣고 다니는 이동식 발사차량(발사대)은 최대 40기 안팎인 것으로 추정된다.

스커드-B와 스커드-C 미사일은 이란이라크 전쟁중이던 이란과 시리아에 다량 수출했다. 1990년대에는 사정거리 1,000km 내지 1,3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서 1998년 작전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⁵ 1990년대 말 북한은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98년 대포동 1호, 2006년에는 대포동 2호를 시험발사했고, 2009년과 2012년, 2016년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표 3〉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일지

일시	발사장	명칭	북한 주장	성공여부
1998.8.31	함북 무수단리	대포동 1호	광명성 1호 궤도진입 성공	불확실
2006.7.5	함북 무수단리	대포동 2호	발사직후 추락	실패
2009.4.5	함북 무수단리	은하 2호	광명성 2호 궤도 진입 성공	불확실
2012.4.13	평북 동창리	은하 3호	발사 135초 만에 폭발	실패
2012.12.12	평북 동창리	은하 3호	광명성 3호 2호기 궤도 진입 성공	성공
2016.2.7	평북 동창리	광명성 4호	위성궤도 진입 성공	성공

5 유용원신범철 외, 『북한군 시크릿 리포트』(플래닛미디어 2013.8), pp.132~138.

한편 2004년에는 사정거리미사일지도국을 창설 하는 등 탄도미사일의 핵무기 투발수단으로의 역할을 강화시키며, 미사일의 정확성, 지휘통제 능력, 장거리 투사능력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한국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km 이상의 미사일들을 1천기나 배치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을 실전배치 하였다.⁶ 이 미사일에 핵 및 화학무기, 생물학무기를 장착하여 공격한다면 그 피해는 엄청나다.

3. 7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북한의 핵전략⁷

1. 북한의 핵전략

북한의 핵전략은 대외적으로는 핵능력을 고도로 발전시켜 이를 바탕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화한 후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상에 나서려한다. 대내적으로는 수소폭탄 보유로金正은의 군사적 리더십을 강조함으로써, 체제결속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충성심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런 북한의 핵전략은 7차 당대회에서도 잘 나타났다. 7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김정은의 치적으로 수소탄 개발 및 보유를 강조하면서 핵보유국의 위상을 선포했다.

(1) 핵경제 병진노선의 항구전략화

김정은 시대의 지도이념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따라 북한은 제국주의 연합세력과의 대결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 정치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확대, 강화해야 하며, 그 기본투쟁 과업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제시했다.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방법으로 핵경제 병진노선이 언급된다. 즉,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전략적 노선으로 핵경제 병진노선을 선택하

6 국방부, 『국방백서 2014』, p.28-29

7 이하 북한자료 인용은 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서임

는데, 이 노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다. 김정은은 핵경제 병진노선이야말로 “우리 혁명의 최고 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며,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혁명적인 노선”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따라 “국방공업에서 정밀화, 정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우리식의 첨단무장 장비들을 마음먹은 대로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핵보유국, 주체의 핵강국 주장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핵경제 병진 노선’이 항구적 노선으로 들어간 것은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무시하고 핵 무력 증강을 국가 목표 및 전략으로 삼겠다는 의미이다. 핵경제 병진노선이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이후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항구적 전략노선임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지어 선군정치에 이어 김정은 시대는 선택정치라는 이야기도 있다.

병진노선에 따라 북한은 핵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겠다고 한다. 즉,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선언했다. 그래서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의 요구에 맞게 핵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핵무기의 소형화, 다종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여 우리 조국을 《동방의 핵대국》으로 빛내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⁸ 핵강대국이 되겠다는 것을 공식으로 선언한 것이다.

(2)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 과시 : 세계질서의 구축 역할 선언

김정은은 비핵화를 언급했으나 사실상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천명했다. 즉, 핵무기 선제불사용과 핵확산방지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에서 5대 핵보유국이 할 수 있는 일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과 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라는 주장으로 북한은 이들 5개 국가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핵보유국의 의무를 이야기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아랑

꽃하지 않고 핵보유의 길을 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세계 비핵화’ 언급은 전세계가 핵을 포기하면 북한도 포기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 수 소탄까지 보유한 무진막강한 국력을 가진 우리 공화국은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 자들의 핵위협과 공갈, 강권과 전횡을 물리치고 정의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해나 가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 주체의 핵강국”임을 언급했다.

핵보유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질서를 구축하는 데 일원이 되겠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시대가 달라지고 우리나라의 지위도 달라졌기에… 존엄 높은 자주적 강국, 핵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것만큼 그에 맞게 대외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보며 핵보유국의 지위를 견지하는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을 선언했다. 시대가 달라진 만큼 핵보유국 위상에 맞는 대외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3) 대미협상 카드

북한은 “핵무기연구 부문에서는 세 차례의 지하 핵시험과 첫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세계적인 핵강국의 전열에 올랐으며, 미국의 핵위협에 대해 승리를 이루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미국을 세계평화와 안전의 교란자, 파괴자라고 비난하면서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주한미군 및 장비들의 철수를 요구했다.

또한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 위험을 자신의 핵억제력에 의거해서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도 한다. 미국은 핵강국의 전열에 들어선 북한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핵보유국으로서 대접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했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의 핵은 군사적 측면도 있으나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협상카드로 작용한다.

(4) 현대전에 필요한 자위적 군사력

김정은은 핵전쟁의 위험을 언급하면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

하여 ‘자위적 군사력’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들어 핵개발의 당위성을 부여했다. 그래서 핵억제력을 중심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력을 통해 미국의 전쟁도발 책동을 막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했다고 한다.

더욱이 핵과 미사일은 현대전에 적합하며 필요한 수단임을 강조한다. 김정은은 “세계적으로 전쟁양상이 달라지고 조선반도의 정세가 날로 첨예화되고 있는 현실은 무장장비 현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북한에서 핵과 미사일은 반제국주의와의 대결구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또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담보이자, 현대전의 요구에 부합한 수단으로서 핵심적 안보수단으로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선군사상, 선군정치의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지금 세계도처에서 전쟁의 참화가 그치지 않고 여러 나라 인민들이 살길을 찾아 방황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전쟁을 모르는 속에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누려왔는데, 이는 다름 아닌 선군정치의 덕이며 당이 이룩한 최대의 공적”이라고 밝혔다. 북한에서 군과 군사력은 체제 안전의 버팀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5) 대남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

핵과 미사일은 남북한 통일을 위한 담보물이다.⁹ 핵과 미사일은 “선군정치로 공화국의 국력을 비상이 강화함으로써 내외 반통일세력의 새 전쟁 도발 책동을 짓부셔 버리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확고한 담보물”이라고 보고 있다. 강력한 군사력은 제국주의와 남한 내 반통일세력로부터의 전쟁을 억지하고 통일과정에서 외세의 간섭을 제거하고 자주적으로 통일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현재의 남북분단으로 전쟁발발 위험성을 언급한다. “나라의 분열이 지속될수록 조선반도의 전쟁위험은 커지게 될 것이며 민족적 참화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이기에 “조국통일대전의 진군길을 열어제길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우리 식의 현대적이고 위력한 주체무기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국가반항공방어체계를 보다 높은 전략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외부의 공격에 대응하는 미사일방공체계 수립을 언급한

9 임상순, 신대진 “7차당대회를 통해본 북한 대외안보정책의 변화와 그 함의”, 『김정은체제와 조선로동당 7차대회 평가와 과제』(현대북한연구회, 한국평화연구학회 공동세미나 발표문, 2016, 5), p.130

다. 그래서 반항공정보체계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각종 대공화력수단들로 전국을 그물처럼 구성하여 요새화할 것을 주장한다.

2. 북한의 향후 예상태도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 한 상태에서 대남대외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7차 당대회 총화보고와 결정서에서 밝힌 대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치, 주한미군 철수, 반복적인 법률과 제도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대미평화공세를 통해 일단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에 앉으려고 한다. 대화의 계기가 마련되면, 북한은 핵문제보다는 평화협정 회담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 회담에 집중하려 할 것이다. 이는 북한의 오랜 외교적 목표이기도 하다.

또한 북한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핵군축을 내용으로 하는 대화를 제의할 것이다. 아마 순서는 핵군축회담을 먼저 언급한 후에 비핵화 회담을 제기할 것이다. 그런데 비핵화회담은 우리가 생각하는 핵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회담이 아니다. 북한은 비핵화 회담을 핵실험 유예 및 핵시설 동결과 관련한 회담으로 생각한다. 핵실험 유예와 핵동결로 기존의 핵무기를 인정받으려는 전략이다.

현재 미국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미 간에 대화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현재의 제재국면을 돌파하려는 북한은 무슨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미국과의 접촉계기를 마련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 미국의 대선국면을 적절하게 활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수단 중의 하나가 평화협정 공세와 함께 추가 핵실험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스스로 추가 수소탄 실험을 언급한 바도 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는 첫째,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통해 제재국면이 북한체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할 것이다. 그래서 대북제재가 오히려 북한의 추가 핵실험 결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다. 현재 북한의 영변 5MW급 원자로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재처리 활동을 재개했다고 하는데,¹⁰ 이는 대북제재에 상관없이 핵무력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는 것이다. 미국의 응답이 없으면, 결국

10 로이터통신, 2016.6.7

핵실험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김정은 정권은 대북제재에 굴복하는 것이 체제결속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히려 추가 핵실험을 통해 군부를 포함한 북한엘리트층의 결속을 도모하는 것이 김정은 정권의 안정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셋째,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군수 물자가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군의 4대 전략물자인 석유, 고무, 솜, 식용유들을 수입하는 데 큰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군의 전투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고, 군부대의 사기도 낮다. 대북제재로 인한 외화벌이 부족과 군수물자 수입차단으로 군부대가 극심한 물자부족에 시달리게 되면서, 군의 충성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군부는 자신들의 입지확보를 위해 김정은에게 대남도발과 함께 추가 핵실험 감행을 건의할 수 있다.

넷째, 기술적 이유에서도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7차 당대회에서도 소형화, 다종화를 언급할 만큼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소형화, 경량화가 목표인 핵탄두를 기술적으로 시험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핵실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4. 핵안보와 한반도

1960년대 말부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증대됨에 따라 핵물질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핵물질의 불법탈취 가능성이 예견되면서 예방차원에서 핵안보가 제시되었다. 특히 1990년대 초반 소련이 해체되면서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핵안보란 개념이 부각되었다.¹¹ 또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 이후 테러리스트 조직에 의한 핵물질 및 핵시설 악용가능성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대두되자, 핵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핵안보가 다시 한 번 강조되기 시작했다.

지구촌 차원에서 핵안보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2009년 4월 프라하에서

11 박정은, 구갑우, “핵안보정상회의와 핵없는 세상”, 『경제와 사회』(비판사회학회, 2012,6), p. 153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핵무기 확대금지, 핵무기 수 감축, 핵물질 안보 강조를 발표하면서이다. 현재 세계에는 약 1,600톤의 고농축 우라늄과 약 500톤의 플루토늄이 산재해 있으며, 이 정도 규모의 물질은 핵무기 약 126,500개를 만들 수 있는 양으로 평가된다. 특히 2010년 4월 47개국 대표가 워싱턴에서 1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고 2차 회의를 2012년 한국에서 개최하면서 국내적으로도 핵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¹²

핵안보 개념을 보면, 국제원자력기구는 “불순세력이 여러 수단을 통해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및 사후적 일체의 조치”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9.11테러 이후에는 주로 핵테러에 대한 관심을 두었으나 2009년 일본의 대지진 이후에는 원전사고 이후 지진이나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 인터넷을 통한 전산공격으로 인한 주요시설의 작동불능과 전자교란으로 인한 주요시설, 장비의 마비, 탈취 등 전자공격도 핵안보의 영역으로 추가되었다. 따라서 자연재해 및 전자공격이 추가되어 핵안보란 “핵물질, 여타 방사성 물질, 혹은 관련시설에 대한 탈취, 사보타주, 무단접근, 불법이전 혹은 기타 악의적 핵테러, 자연재해, 전자공격의 예방, 탐지, 대응”이라 정의할 수 있다.¹³

핵안보 관점에서 북핵문제를 바라보면 몇 가지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 첫째,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통해 대남전략적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남북관계에 심각한 군사적 불균형을 추구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즉, 핵과 같은 비대칭 전력 중심의 군사력 강화로 국력과 재래식 군사력 열세를 만회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김정은체제가 위기에 처하거나 군사적 열세로 안보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핵사용 위협을 하거나 과시적으로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¹⁴ 우리가 북한의 핵공격을 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피해규모는 2차 세계대전 히로시마, 나가사키 피해규모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반도는 초토화된다.

그런데 이런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위협은 주변 국가들의 군사경쟁을 촉진시키고 동북아 지역의 ‘핵 도미노’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북핵능력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양국은 재래식 군사력의 증강과 배치 등 최고의 화력을 한반도에 집중

12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핵안보 관련 동향 조사분석』(2012), p.1

13 전봉근, 『한국의 세계적 국익과 핵안보』(국립외교원, 2016, 3) p.3

14 과시적 핵사용은 공해상 또는 고공에서 핵폭발 위력과시로 위협하는 것이며, 전술적 핵사용은 제한된 군사시설이나 병력집결지역을 타격하는 것이며, 전략적 핵사용은 인구밀집 대도시나 산업단지 등을 파괴하는 것이다.

배치하게 된다. 또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핵우산 강화로 한반도의 핵군비가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우리는 현재로서는 직접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다. 그러나 한국의 핵개발 의사를 상쇄시키기 위해 막대한 핵전력을 한반도에 집중배치하게 되면서 동북아 군비경쟁을 부추기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핵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재래식 무기를 동원하면서 오히려 핵은 재래식 무기의 증강이라는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는 역설을 초래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전자전을 활용해서 우리의 원전시설에 대한 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핵테러 가능성, 예컨대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와 드론을 이용한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는 백두산 화산폭발 등 지정학적 환경과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백두산 화산이 향후 20년 내 폭발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백두산 화산폭발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졌다. 일본의 도호쿠대 다니구치 히로미쓰 교수는 백두산의 분화시점은 일본의 대지진과 큰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대지진과 같은 큰 충격이 백두산에 가해질 경우 폭발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북한의 핵실험 장소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가 백두산과 가까우며, 핵실험의 영향으로 생겨난 지진이 백두산에 충격을 가하여 분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¹⁵

연세대 홍태경 교수는 백두산 아래로 흐르는 마그마층은 함북 방향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북핵실험이 이 마그마층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실제로 1차 북핵실험 이후 러시아 기상관측위성이 측정한 자료에 따르면 백두산 정상에서 고온의 가스와 열이 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백두산 아래 마그마활동이 분화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¹⁶

부산대 윤성호 교수에 따르면,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2010년 2월 두만강 유역에 리히터 6.2의 지진이 발생했고, 백두산 지하 1층 마그마가 천지 아래 2킬로 부근까지 접근한 것으로 추정한다.¹⁷ 북핵실험이 백두산 화산 폭발에 직접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면, 천지에 담겨있는 약 20억 톤의 물이 흘러내려 백두산 인근에는 대홍수가 발생하여 큰 환경재난을 입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¹⁸ 또한 백두산 폭발로 인한 화산재는 대기권의

15 김진무, “북한의 3차핵실험과 백두산화산폭발”(동북아안보정세, 2012,6),pp.1

16 김진무, 앞의 글, p.2

17 윤성호, “백두산화산의 실태, 폭발의 가능성과 영향” 백두산 화산관련 대책전문가 간담회자료 (2011.4),p.8

18 오창환, “백두산화산 분화로 인한 피해 및 대응방안”(국회세미나, 2014,9), pp.25-28

로 올라가 햇빛을 차단하여 세계 기온을 비롯해 지구적 차원의 환경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¹⁹

그동안 북핵문제는 정치군사적 차원의 문제로 간주되었으나 백두산 폭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제 북핵문제는 한국, 미국, 중국 등 동북아국가 문제뿐만 아니라 핵안보란 차원에서 전 지구촌의 관심사가 되었다.

셋째는 북한 원자로의 안전이다. 핵시설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많은 시점에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체계와 대응시설이 잘 구비되지 않은 북한의 핵시설 안전성 및 사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특히, 설계 수명 30년이 넘는 영변 5MWe 원자로의 안전설비 미비로 사고가능성에 따른 방사선 유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넷째는 북한의 핵물질과 관련기술의 해외이전 가능성이다. 북한은 군사용 핵분열물질을 생산하는 소수국가이며, 핵물질의 해외이전 또는 밀거래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소련공산주의 해체이후 이들 국가의 핵물질의 해외이전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다. 북한의 핵시설과 물질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

북한의 핵폐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은 정권 혹은 북한체제의 변화가 발생할 때, 이들 핵시설과 핵물질, 핵기술의 해외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북한체제 변화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핵, 생화학, 미사일 시설의 위치를 확인하고 통제하는 데 있다.²⁰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통제를 책임질 세력이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북한의 핵물질과 기술이 테러세력이나 중동국가 등 제 3국으로 유출되는 경우는 국제사회로서는 상상하기 싫은 최악의 상황이다. 어쩌면 핵무기 통제만을 놓고 볼 때, 미국은 북한정권의 붕괴가 북한체제 유지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본다.²¹ 따라서 이런 북한의 핵물질과 기술이 외부로 이전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대비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하고 확실한 방법은 북한의 핵폐기이다.

19 박재은, 김혜원, “백두산 화산폭발 피해영향과 시나리오개발”, 『재난안전』(2013, 겨울호), p.65; 윤성호, “백두산화산 폭발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 및 대응방안”,(국회세미나, 2011.3), p.6

20 Derek Mitchell et al., A Blueprint for U.S. Policy toward a Unified Korea (CSIS, August 2002), p. 6.

21 Paul B. Stares and Joel S. Wit, “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Council Special Report, No. 42 (January 2009) p. 23.

5. 맺음말

21세기 들어 지구촌은 새로운 형태의 전쟁과 파괴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테러전쟁과 이에 악용될 수 있는 핵물질을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가능성이다. 특히 핵무기의 확산과 이전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북핵문제도 그 중의 하나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북핵문제는 활화산의 성격을 띠고 있어 언제든지 한반도 정세에 위협적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동안 북핵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다급한 문제라는 데에는 인식이 부족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로 국제사회는 북핵문제를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으로 간주하여 계속적인 관심 사안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북한의 핵위협에 따라 한반도는 향후에도 여러 차례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많다. 향후 북한은 제2, 제3의 수소탄 실험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추가실험을 할 수도 있다.

한편 북핵은 미중 간에 협력국면도 조성하지만 갈등과 대립의 국면도 초래한다. 최근 이수용 북한 당 정무국 부위원장의 시진핑 면담으로 북중 간에 새로운 관계개선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이에 미국은 자금세탁우려국으로 북한을 지정하면서 북미, 미중 간에는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여전히 중요한 지정학적 가치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시장이기에 완전히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국가이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복잡성을 잘 나타내는 대목이다. 북핵문제에 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지혜로운 해결책이 필요할 때이다. 

발표 2

한반도 비핵·평화체제는 가능한가?

박영호 강원대학교 초빙 교수

I. 문제 인식

1989년 9월 프랑스 위성 SPOT 2호가 영변 핵시설을 촬영·공개하고 11월 5MWe 원자로에서 약 8,000개의 폐연료봉이 인출되면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대두되었다. 이후 25년 이상이 흐른 지금 북한은 네 차례의 핵실험을 하고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었다. 핵무기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의 개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김일성은 1991년 12월 17~19일 평양을 방문한 당시 미국 하원의원 솔라즈(Stephen Solarz)에게 “북한은 핵개발 능력도 의사도 없다”고 말했다.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핵화가 김일성의 유훈이라고 말했다. 김정일의 통치 기간에 북한은 비핵화 등을 포함한 ‘제네바합의’를 미국과 체결하였으며, 역시 비핵화 등을 포함한 ‘9·19공동선언’을 한미일중러와 함께 채택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의 유훈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고, 두 개의 비핵화 관련 주요 합의는 사실상 빈 종이장이 되었다. 김정일의 선군정치 시대에 비밀리에 진

행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은 큰 진전을 이루었다.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북한은 그의 3대 유산 중 하나로 ‘핵과 인공위성(탄도미사일)’을 들었다. 국내외의 많은 정책결정자들과 북한 관찰자들이 김정일의 나이 어림을 지적하였으나 그가 집권한 지 5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은 핵무기의 경량화다종화다량화를 추진하며 SLBM을 개발하는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한·미·일·중·러 5국이 여전히 ‘9·19공동선언’의 유효성을 유지하려하고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해왔으나, 동 회담은 8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북한에게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은 이미 정책대안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른바 ‘북핵 문제’가 한국의 대북정책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대북관계에서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이후 그 문제는 처음에는 미·북 양자 간의 문제로 보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남북한과 미·일·중·러 6개국 간 복잡한 다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이 제시되기도 하고 북한의 합의 위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따른 유엔안보리의 제재 등 압박 조치도 시행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북한체제 ‘압살정책’과 ‘핵위협’을 이유로 대면서 군사강국 즉 핵보유국의 목표를 향해왔다.

2016년 1월 6일의 4차 핵실험과 한 달 후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북한은 비군사적 제재로는 가장 강력하다는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다. 한·미·일과 그 우방국, 유럽연합국 등이 대북 제재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양자 차원의 제재 조치도 발표·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미국이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압력을 높이는 데 반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병행 추진을 제기하고 있다. 분명한 입장 차이가 있으나 미·중 간 그 문제가 논의되기도 하였다. 필자도 이미 여러 차례 ‘안보 대 안보 교환론’을 제기하면서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의 병행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보다 분명하게 핵보유국으로서의 전략을 추진하려 한다. 최근에는 북핵 문제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과 연루되면서 더 복잡해졌다. 한·미·일 3국은 대북 압박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나 중·러는 THADD의 한국 배치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대미 견제의 공조에 나서고 있다. 그 사이 북한은 고농축우라늄 생산은 물론 영변의 흑연감속로 원자로에서 꺼낸 8,000여 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서 핵무기 원료의 양을 늘리고 있다. 한·미·일·중·러 어느 국가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비핵화의 목표를 견지하고 있으나 접근 방법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북핵 문제’의 내용이 달라지고 구조가 더욱 복잡해졌다.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핵보유국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신통방통한 묘책은 있는가? 지난 25년 이상의 실패 경험이 미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지만 그래도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 글은 그러한 시도의 하나다.

II. 노동당 제7차 대회: 사실상의 핵보유국 위상 선언

북한은 현실 사회주의국가 중에서도 유례가 없는 권력 세습 3대의 봉건적 성격을 가진 체제다. 당 우위의 체제이면서 김일성-김정일 집권시대에 굳어진 유일지배체제는 수령의 명령, 지침, 결정 등이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한다. 이러한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문헌이 2016년 5월 36년 만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김정은이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와 당 대회 결정서다.¹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업적을 칭송하고 현재의 지도자 김정은에게 충성을 바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두 문헌에서 북한은 1980년 10월에 개최한 제6차 당 대회 이후 현재까지의 북한 내외의 상황, 김일성-김정일 시대를 결산하고 평가했다. 그리고 향후 북한의 국가발전 전략의 대강과 각 분야의 정책 노선, 계획, 과제 등을 밝혔다. 그 기간 동안 내외의 정세에 대한 북한의 자체 평가는 한마디로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공세”에 대응하여 특히 사회주의진영이 붕괴한 국제환경 속에서 “사회주의의 보루”인 북한체제를 지키는 것이었다. 제국주의에 의해 포위되어 있다는 국제질서관은 오래전부터의 인식이었으나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는 바로 북한이 처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정치방식이었음을 밝혔다.

선군정치 아래서 북한체제를 지키기 위한 국방력의 강화는 핵과 미사일을 유

1 이하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 관련 내용은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 5. 8)과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결정서” (2016. 5. 8)를 참조.

산으로 남겼으며 김정은 시대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을 낳았다. 이미 사회주의헌법에 ‘핵보유국’이라고 규정했으나 7차 당 대회를 통해 당 차원에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공식화했다. 세 차례의 핵실험과 첫 수소탄 실험을 통해 ‘세계적인 핵강국’이 되었으며 미국의 핵위협에 종지부를 찍게 했다고 평가했다.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성공했다고 자랑했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유엔안보리의 결의 2270호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었으나 한 발 더 나아가 핵무력을 질적, 양적으로 강화하여 ‘동방의 핵대국’이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러한 핵무기 능력 증대 전략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의 토대 위에 서 있다. 북한은 이 ‘새로운 병진노선’을 김정은 시대의 항구적 전략노선이라고 공포했다.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방위력을 강화하면서 경제건설을 통해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제7차 당 대회에서 결정된 북한의 대외정책 노선은 ‘자주, 평화, 친선’이라는 전통적 구호 아래 어떠한 정세 변화나 주변관계 변화와 상관없이 “자주, 선군, 사회주의”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핵보유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관계를 발전시키며, “핵보유국의 지위를 견지하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 의한 핵전쟁위험을 자신의 핵억제력으로 종식시킬 것이며 “지역과 세계를 평화를 수호”하겠다는 공언도 했다. 동시에 그동안 핵무기 개발 이유로 주장해온 미국의 “핵위협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병진노선에 따라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확산방지의무를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 북한과 적대관계에 있었던 나라와도 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북한을 우호적으로 대하면 관계 개선과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 미국에 대해 북한이 핵강국의 지위에 올라섰음을 인식하고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북 “제재압살책동을 중지하고” 한반도문제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반통일정책’과 ‘제도통일’ 정책을 버리고 국제공조를 중단하며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호응할 것을 요구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군사대화를 제안하면서 비무장지대에서의 심리전 방송 중단, 전단 살포 중지, 연공행위를 막는 법률적·제도적 장치의 철폐 등을 촉구하는 것

을 잊지 않았다.

제7차 당 대회에서 행한 김정은의 사업총화보고는 김일성-김정일 시대를 결산하면서 김정은 시대의 국가발전 전략을 총괄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북한은 제7차 당 대회 결정서에서 이를 “백과전서적인 정치대강”이자 “주체혁명의 백년대계의 진로를 열어놓은 위대한 강령”이라고 규정했다. 여기에서 제시된 목표와 추진 전략, 계획들이 그대로 실천되려면 내외의 조건이 잘 맞아야 하지만, 김정은 시대에 당과 군, 내각은 물론 모든 기관 및 단체와 북한 주민들이 동원되는 근거이자 대내대외정책의 준거임에 틀림없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가 인정하지 않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다. 노동당 7차 대회의 사업총화보고와 결정서에는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다. 그 대신 스스로 자리매김한 핵보유국이라는 입장에서 ‘세계의 비핵화’를 주장했다. 이제 더 이상 비핵화가 김일성의 유훈이라고 언급하지도 않는다.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북한체제를 보위하기 위하여 미국의 핵위협이 종식되지 않는 한 억제력으로써 핵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대외관계도 핵보유국으로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남한 정부에 대해서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연방제’ 통일에 호응할 것을 주장하면서 하나의 체제 통일을 지향하는 ‘제도통일’을 고수하면 “반통일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한마디로 핵보유국으로서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더할 수 없이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III. 북한과 핵무기²

왜 북한은 핵무기에 집착하는가? 북한의 대외인식은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 ‘자주성 대 제국주의’라는 이분법을 그 기저로 한다.³ 사회주의의 붕괴를 “제국주의자들과 반혁명세력의 공모결탁의 산물”로 보았으며,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2 이 부분은 필자가 “북핵 문제와 한국의 정책”이란 제목으로 ‘한반도포럼 창립 5주년 기념 학술회의’ (2016. 4. 25, 롯데호텔 37층 가넷스위트홀)에서 발제한 초안의 일부로 수정보완하였다.

3 박영호, “대외관,” 통일연구원 편, 『김정일연구: 리더쉽과 사상(1)』(서울: 통일연구원, 2001), pp. 154~180.

북한의 “자주성과 사회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피포위 의식’이 더욱 강해졌다.⁴ 제국주의의 전면에 미국이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시작된 북핵 문제의 근본 원인이 미국의 핵위협과 압살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⁵ 김정일은 이미 그가 당 사업을 시작한 1960년대부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핵공갈로 (사회주의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⁶

전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한 무력 통일에 실패한 이후 북한의 안보전략 목표의 핵심 중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와 핵 철거⁷ 등 미국의 안보역량을 한반도에서 배척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북한이 NPT에 가입한 중요한 목적은 “미국의 핵위협 제거”⁸ 즉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철거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북한의 목표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전략적 목표로 선택하고 추진한 것은 사회주의진영의 붕괴에 따른 북한체제 위기 인식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진영의 붕괴를 보면서 체제안보 차원에서 핵무기를 자위적 수단으로 선택하였다. 이라크전쟁은 북한의 ‘제국주의’ 세력에 의한 피포위 의식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중국과 소련이 한국과 국교를 맺으면서 북한의 위기감은 고조되었다. 김정일은 “소련과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엄혹한 도전과 시련”에 대응하는 북한체제 위기관리의 기제로써 선군정치를 만들었다.⁹ 선군정치 아래서 핵무기 보유는 자위적 수단이자 공세적 전략의 방식으로 간주되었다.¹⁰ 사회주의진영 붕괴라는 급격한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체제안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자 북한의 선택은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보다는 김일성 유일지배체제로 변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수구 반동적 방어 전략이었다. 핵무기와 미사일은 약소국 북한에게 체제수호를 위한 초강대국 미국에 대한 억제력으로 인식되었다. 김정일 시대에 핵무기가 체제 수호를 위한 ‘총대’로 간주되었던 것처럼 김정은 시대에도 핵무기는 “사회주의정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하는 ‘총대’로 간주되고 있다.¹¹

4 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근로자》에 발표한 담화. 1993년 3월 1일. 『김정일선집』 13 (1992.2-1994.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5 정기중, 『력사의 대하』(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8), p. 494.

6 김정일,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당사업부문 및 문학예술부문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7월 3일), 『김정일선집』 1(1964-196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7 남한에서 전술핵이 철수한 이후에는 미국의 핵우산 철폐.

8 김인옥, 『김정일장군 선군정치론』(평양: 평양출판사, 2003), p. 251.

9 김인옥, 『김정일장군 선군정치론』, p. 1.

10 엄국현, 윤금철, 『조선반도 평화보장문제』(평양: 평양출판사, 2006), p. 156.

핵무기 개발을 체제수호를 위한 억제력으로 전략적 선택을 한 상황에서 북한은 핵을 협상수단으로도 활용하였다. 북핵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부터 북한의 협상 목표는 “미제가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을 중지하며 압살책동을 포기한다는 정치적 공약을 받아내는 데” 있었다.¹² 북한은 핵을 매개로 미국과 협상하여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1993년 3월 12일 NPT 탈퇴를 선언하여 “핵 문제를 정치군사화 하고” 미국의 아픈 곳을 찌르자 미국이 “할 수 없이 조미협상 타에 나왔(다)”고 보았다.¹³ 북한은 북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이후 핵을 경제 및 에너지 지원, 안전보장 등을 확보하려는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동시에 북한은 체제안보의 또 다른 방편으로써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협상의제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1991년 1월 1일 김일성 신년사에서 마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한 북한은 미국과 제네바합의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협상의제로 제기하였다. 예를 들면, 제네바합의의 북한 측 협상대표였던 강석주 당시 외교부 제1부부장은 1993년 11월 12일 북핵 문제와 북미관계 개선의 일괄타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핵투명성을 보장하는 대가로 북미수교, 국가승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등 ‘적대정책’ 해소를 요구했다.¹⁴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함께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시정책 포기’의 중요 요소로 간주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¹⁵ 제네바합의의 채택과 파기, 그리고 6자회담을 거쳐 9.19공동성명 등이 채택되고 그 효력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지속되고 있다. 1993년 6월 11일의 마북 간 첫 합의에서부터 제네바기본합의, 마북 공동코뮈니케, 9.19공동성명에 담긴 북한의 목표는 미국의 핵불사용 및 불위협 보장, (자)주권 존중, 관계정상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등이다.

김정일에게 핵무기와 미사일은 체제안보의 수단이자, ‘제국주의’ 미국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사상적 무기이며, 1인 독재자 개인권력 유지의 수단이

11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언 (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p. 39.

12 정기중, 『력사의 대화』, p. 491.

13 김인옥, 『김정일장군 선군정치론』, p. 252.

14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전개 과정 및 발전 전망』(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59~60. 지금까지 이러한 북한의 주장과 미국의 관심 사안을 담은 가장 포괄적인 문서는 2000년 10월 12일 발표된 북미 공동코뮈니케(US-DPRK Joint Communique)이다.

15 최근의 주장으로는 김정은, “신년사” (2016. 1. 1),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 5. 8)과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결정서” (2016. 5. 8) 등을 참조.

었다.¹⁶ 핵과 미사일은 체제수호를 위한 군사력의 핵심으로서 미국의 끊임없는 북한 ‘압살정책’을 억제할 수 있는 전쟁억제력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제국주의와의 끝없는 대결에서 승리를 담보하는 정치적 수단이다. 김일성 가계 세습권력 3대의 독재자 김정은에게도 마찬가지다. 이제 핵무기는 체제와 정권과 유일지배 독재 권력을 담보해줄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는 보루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없는 대안은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체제 유지 집단에서는 별로 검토해볼 가치가 없게 된 것이다.

요컨대 북한이 인식하고 주장하는 ‘북핵 문제’란 미국의 “패권주의적 힘의 정책에 기반한 대조선지배전략과 대조선핵위협책동의 산물”로서 등장했다는 것이다.¹⁷ 북한은 미국이 사회주의진영 붕괴의 국제질서에서 북한을 압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핵 문제를 제기하여 1차 핵위기가 발생했으며, 2002년 10월에 새로운 핵위기가 터진 것은 남북관계, 북러관계 북일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논리를 편다.¹⁸ 북한이 애초부터 핵무기 개발 전략을 선택한 상황에서도 비핵화 합의를 하고 또 합의를 깨뜨리면서 핵무기 개발을 지속한 것에 대한 변명의 논리이지만, 북한의 사고구조 속에는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전략은 이러한 인식과 사고구조로부터 나온다.

IV.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안¹⁹

1. 마중알라한 5개국의 입장비교

2016년 1월 초 단행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16 박영호, “북한 외교정책에서 핵미사일(대량살상무기)의 의미와 한계,” 『평화와 안보』, 제3권 (2006), pp. 11~22.

17 김인옥, 『김정일장군 선군정치론』, p. 250.

18 김인옥, 『김정일장군 선군정치론』, pp. 253~254.

19 이 부분은 그동안 필자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 접근”이란 제목으로 코리아정책연구원 주최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우리의 역할 강화 방안’ 주제의 전문가 초청세미나(2015. 11.23)에서 발제한 내용을 비롯하여 여타 세미나 발제문, 언론 칼럼 등을 통해 주장한 내용을 근간으로 하면서 수정보완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이행되고 있다. 중국도 2270호의 전면적 이행을 공약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제재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에 임하는 기본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 필자는 제재가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한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우선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와 함께 양자 차원에서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을 지정하는 등 가장 강력한 제재를 이행하는 중이다. 미국은 무엇보다 NPT 체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 당연히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악의 축’ 국가로 불렸던 이라크, 이란, 북한 중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의 문제를 상당한 수준으로 해결했다. 쿠바와 국교를 정상화하고 핵안보정상회의를 마무리함으로써 충분한 외교적 업적을 쌓았다. 북한의 핵능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아직 미국을 직접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중동지역의 전략적 균형과 미국 주도의 국제에너지정치 차원에서 시리아문제와 이슬람국가(ISIS) 문제가 당면한 해결과제다. 아시아 재균형정책에 따라서 북핵 문제도 주요 현안이다. 그러나 중국의 공세적 남중국해 진출로 인한 갈등에서 보듯이 중국을 견제 ‘봉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 북핵 문제는 대중국 전략 차원에서 중국에게 더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²⁰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자국과의 약속을 번번이 위반하고 NPT체제와 유엔의 권위에 도전하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채찍을 휘두르는 것이 우선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략적 인내’ 정책 아래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중국이 제안하고 있는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에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나 당장에는 압박정책을 통해 북한의 행동 변화를 견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제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도 북한과의 대화에 문을 닫아 놓은 것은 아니며 대화를 시급하게 필요로 하지도 않지만 북한의 자세 여하에 따라서는 대화와 협상의 자리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압박에 동참하고는 있으나 협상을 강조하는 것이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입지를 부각하고 과시하는데 더 유리하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20 이러한 입장은 2016년 6월 7일 종료된 제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도 나타났다. 케리 미국 무장관은 “대북제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마땅히 (미국과 중국이) 보조를 맞추고 지속적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모든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것을 (동시에) 병행해 추진하는 협상방식을 제안”하고 미국과 협의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이 방안을 “동북아가 능히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비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²¹ 한국과 미국의 THAAD 한국 배치 추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과 결부된 제안으로도 평가되지만 중국은 대미 전략 차원에서 여전히 북한이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강한 대북 제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한반도비핵화 3원칙(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핵능력 증대는 잃어버렸던 중국의 동아시아지역 패권 회복을 위한 대미 전략과 경제발전 전략에 명백한 도전 요인이다. 최악의 경우 상당 수준의 핵무기와 핵능력을 보유한 북한이 중국의 대국굴기 전략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동아시아지역 패권국으로 다시 등장하려는 중국에게 북한은 계속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 그렇다고 하여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승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의 아베 정부는 미국의 아태지역 재균형전략에 편승하여 중국이 동아시아지역 패권국으로 등장하는 것을 견제하려고 한다.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중재로 한·미·일 대북 공조체제 부활에 동참하였다. 일본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북핵 문제를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 요인으로 간주하고 시급한 해결 사안으로 보고 있으나, 한반도정책 추진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일본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중시하지만 그보다 자국인 납치문제의 해결이 국내정치적으로 더 중요하다. 일본의 아베 정부는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의 병행 논의 제안에 관해서 뚜렷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마일 공조 차원에서 미국이 그 문제에 대해 보다 관심을 보이게 되면 일본도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의 푸틴 정부도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공식 승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강압적인 방식만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유보적 입장이다. 북한의 핵을 러시아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요인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북핵 문제가 주는 러시아의 한반도문제 개입의 기회와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미국의 THAAD 한국 배치를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 문제로 인한 미국 주도의 제재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견제가 러시아 대외정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1 『경향신문』, 2016. 2. 17.

러시아는 과거 한반도문제에 소외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였으며, 따라서 6자회담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하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의 병행 논의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자국의 영향력 투입 차원에서 특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 제공자이며 핵실험으로 한국과 동북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강한 조치를 취하면서 대북 제재에 앞장서고 있다. 북한의 핵은 결국 북한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다양한 차원의 제재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제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화와 협상이 차지할 공간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평화협정 문제는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 한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결국 6자회담 참여국 모두가 대북제재에 동참하고는 있으나 당장에 자국의 안보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받지 않는 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중 어느 나라도 앞장서서 북핵 문제의 해결에 나설 이유는 없다. 북핵 문제의 해결이 가장 시급하게 요청되는 국가는 한국이다. 한반도 긴장상태 완화와 안정을 위해서나 중장기 차원에서 통일정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나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문제 해결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한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앞을 내다보는 정책과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국과 양자, 다자 차원의 협력을 통해 그 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제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북한과 교착된 관계를 풀고 긴장완화, 평화정착 등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입장이 요청된다. 평화협정 문제는 역대 한국 정부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다. 이 문제에 소극적인 자세를 가질 이유는 없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북한의 핵능력이 증대하면 할수록 한국의 대미 안보의존도는 더 높아지고 안보 자율성을 확보할 기회는 좁아지게 될 것이다.

〈표 1〉은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 전략적 중요성 및 긴박성과, 비핵화-평화협정 논의 병행에 관한 한국과 주변 4국의 입장에 대한 필자의 평가이다.

<표 1> 북핵 문제와 비핵화-평화협정 논의 병행에 대한 5개국 입장비교

국가	접근/정책수단	전략적 중요성	긴박성	비핵화-평화협정 논의 병행
한국	압박>>협상	高	高	無/低
미국	압박>>협상	高-中	中	有/低
일본	압박>>협상	中	中	有/低
중국	압박-협상	中-低	中	有/高
러시아	압박-협상	低	低	有/中

2. 정책 제안

제7차 노동당 대회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김정은 정권은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위상을 세우고 그에 토대를 둔 대외관계, 대남전략을 추진하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군사안보전략은 핵무력을 중추로 한 방위력에 기반하여 개발하고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이 물려준 핵과 미사일의 유산을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의 전략으로 정립했다. 2016년 1월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보여준 노골적인 ‘핵능력 과시’는 ‘허풍’도 내재되어 있었으나 체제안보를 위한 핵의 효용성에 대한 북한식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북한이 북한 특유의 안보·외교 전략으로 자랑하는 ‘고슴도치 전략’과 ‘공세적 맞대응 전략’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북한은 이미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이후부터 6자회담을 군축회담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고 스스로를 핵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북한은 이러한 주장을 더 강하게 제기할 것이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북한은 핵보유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즉 ‘압살’ 정책과 핵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 억제력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전략은 스스로 평가하듯 사회주의진영 붕괴에 따른 체제수호 수단이자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체제안보를 담보 받기 위한 고리로 활용하는 전략적 수단이다. 또한 정권안보와 유일지배체제의 독재권력 유지를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²² 북한이 핵무기 보유의 목표를 달성한 상황에서는 남한을 인질로 만들 수 있는 수단도 되었다. 남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수단이자 동시에 7차 노동당

22 박영호, “북한 외교정책에서 핵미사일(대량살상무기)의 의미와 한계,” pp. 11~18.

대회에서 남북군사회담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자신감의 이유이기도 하다. 김정은이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한 이후 5월 20일 국방위원회 담화, 5월 21일 김기남 당 중앙위 부원장 담화와 북한 인민무력부의 실무접촉 제안, 5월 2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등을 통해 군사회담을 계속 제안했으며, 남한 정부가 비핵화가 우선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위협을 하기 시작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함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체제방어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선택했다. 사회주의진영이 해체되고 한국이 중국과 소련(러시아)과 수교하고 국력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비대칭 전략무기 개발과 대미 접근 전략은 체제생존 전략이었다.

이러한 성격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는 현재의 정세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김정은 체제에서도 북한의 최우선 안보전략은 체제유지이며 정권의 유지와 유일지배체제의 유지다. 다만 핵보유의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이 판단하는 협상 입지는 과거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국제제재가 더욱 거세지는 환경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하더라도 전반적인 대내외 환경은 북한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 탄력성은 잠재적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하다. 북한의 체제 탄력성 내지는 내구력은 사회주의진영 붕괴와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면서도 크게 부식되지 않았다. 외부 정보의 유입의 증대, 시장화 현상의 확산, 일부 당원들과 주민들의 이탈 등이 불안정의 요인은 되지만 북한체제의 붕괴를 쉽게 초래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북한 붕괴론’을 전제로 한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은 다시 한 번 오판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이 핵무기를 체제 방어에 보루, 전략적 수단으로써 선택했다면 그 문제를 염두에 둔 대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북한은 사회주의진영 붕괴 이후 제국주의에 의한 체제 위기를 방어하는데 집중하였다. 제7차 당 대회에서의 사업총화보고에서 “지난 세기말 세계적인 반사회주의, 반혁명의 역풍 속에서 엄중한 도전에 부닥치게” 된 상황에서 “군사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에 의한 선군정치의 ‘강력한 총대’가 “사회주의의 성세를 튼튼히 보위할 수 있게 한 담보”가 되었다는 평가에서 알 수 있다.²³

북한은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과 관련해서도 북한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기 위한 차원에서 점차 남북 공존의 방식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애초 ‘고려연방제’의 중앙정부는 외교권, 국방권을 갖는 최종적인 통일국가의 형태로

23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 5. 8).

주장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의하면서 지역정부(남과 북)가 각기 외교권, 국방권을 갖는 방안이라고 주장하였다.²⁴ 이는 6.15공동선언에서 나온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이어졌다. 정치, 군사, 외교권 등 현존하는 남북 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민족 통일기구’를 내오는 방식으로 통일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두 개의 체제의 공존 방식을 원하는 것이다. 북한은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제도에 의한 ‘제도통일론’은 “누가 누구를 먹는 방법”이며, ‘제도통일’을 강요할 경우, 불신과 대결이 격화되고 나아가 충돌과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 재난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7차 당 대회와 사업총화보고와 결정서의 통일 분야에서 그대로 반복되었다. 북핵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써 통일정책에 대한 인식과 사고틀의 변화를 착상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공존을 통한 통일’ 접근방법이 북한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수단으로써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관점에서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은 종종 도덕주의, 이상주의, 민족주의 등이 개입되어 왔다. 7.7선언 이후의 남북관계와 국내에서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생생하게 증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래야 현실 상황에 토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정권의 교체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전략과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협상의 틀과 접근 방법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 국제 경험 사례를 보면, 제재와 압력이 단기간 내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쿠바의 사례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이란의 경우 북한과의 상황이 매우 다르다. 특히 북한의 경우 중국의 후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관계 차원에서 중국이라는 배후지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중국과는 정도의 차가 있으나 러시아의 배후지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더욱이 제재와 협상이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적대관계 속에서도 또 제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거래관계를 맺거나 유지할 수 있고 협상을 할 수 있다. 북한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불안정의 사전 관리 차원에서도 대화하고 협상하며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대화와 협상의 추진이 제재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6자회담은 실질적 기능이 정지된 상태이다. 그러나 6자회담을 대체할 새로운

24 김일성, <신년사: 1991년 1월 1일>, 『김일성저작집』4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다자 틀을 만드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6자회담을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틀로 계속 활용하려할 경우 6자회담의 구조와 운영은 달라져야 한다.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변형된 다자, 양자회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능력의 지속적인 증강, 핵능력 고도화를 시급하게 중단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북한 내부의 다른 조건에 큰 변화가 없이 북한의 핵능력이 증대하면 할수록 한국의 입장은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마중간의 경쟁구도가 심화된다면 우리의 정책 선택의 폭은 더욱 딜레마에 처하게 될 수 있다.

국제사회의 강한 연대를 통한 압박과 제재가 일정한 기간 내에 북한의 양보를 견인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상당한 정도의 신뢰도를 갖는 전략적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제재의 지속과 함께 북한을 대화의 틀로 견인하는 기회를 선제적(proactive)으로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협상의제에는 반드시 북한의 최대관심사인 체제안전보장문제가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현 체제에서 북한에게 핵무기는 양보하기 어려운 전략적 수단이다. 경제보상과 맞바꿀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은 이미 그동안의 협상 경험과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집착의 원인에서 알 수 있다. 사실 제네바합의는 물론 9.19공동성명과 동 성명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인 2.13합의, 10.3합의, 2.29합의 등은 북한의 안보문제와 비핵화를 맞교환하는 방식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이행의 과정에서 서로가 자기 측 몫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면서 신뢰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북한은 네 차례의 핵실험을 하고 핵보유국이 되었다.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그리고 2270호에 따른 국제제재가 이행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미국 등 개별 국가들의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인권문제 등과 관련 압박도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예의 맞대응 전략으로 대응하면서 긴장 국면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의 경험 사례를 보면 북한이 비핵화로의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향후 몇 년 내에 북한체제가 민주화로의 이행으로 성격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공포통치와 강압정치의 현실이 보여주는 고도의 비도덕적 정권 성격 때문에 '안보(북한의 체제안전보장, 평화협정) 대 안보(비핵화)의 교환' 방식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냉정한 현실주의 시각에서 전략을 구상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와 같이 수사적인 원칙만 반복하면서 북한의 핵능력은 지속적으로 고도화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

북한 핵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이 더욱 목소리를 크게 낼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처한 국제정치 경제의 현실이나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최근 미국에서도 나오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가능성 논리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불신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사실상 배치하는 효과를 갖는 방안도 있다. 과거처럼 NCND 정책이 동반된 배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이 방안 역시 간단하게 고려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북한의 핵능력 증대가 가져오는 안보 위기, 안보 부담에 대한 과중한 논리의 등장도 경계할 필요도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북한의 체제안전보장, 즉 북한의 피포위 의식을 완화할 수 있는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비핵화와 ‘실질적으로’ 맞바꾸도록 하는 방법이 현실 가능한 최선의 방법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와 격변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 그 속에서의 핵심 주변국들의 한반도 정책, 북한체제의 내구력과 시장화 현상 등의 경제회복, 한국의 정책 능력과 정치 현실 등 제반 내외의 조건을 염두에 둔다면 북한체제의 성격 변화는 비핵화의 추진과 함께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 과제이자 평화통일이라는 목표에 상응하는 점진적인 추진과제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어야 하며, 국제사회와의 상호 작용을 늘려나가도록 해야 한다.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적극적인 문제 해결자로 나섰으며 미국이 당장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과거 부시 정부 아래서 ‘종전선언’ 문제를 검토한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한국이 이에 관한 적절한 논리와 방안, 협상 방식, 관련된 사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마중 간 전략적 경쟁의 구도 속에서 갑작스럽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요컨대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등한시해온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집착과 체제 고수를 위한 공존의 논리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한국이 무조건 회피할 문제는 아니다. 평화협정 체결문제와 비핵화 문제가 동시 병행적으로 논의되면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데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당장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것도 아니며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된다고 하여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것도 아니다.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문제이며 평화협정의 문제와는 구분하면 된다. 동시에 핵무기의 효용성이 그러한 과정에 핵심적 걸림돌이자 부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핵무기에 대한 전략적 변화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을 국제사회의 틀로 견인하는 ‘상응전략’과 ‘포괄적 관여전략’을 혼합추진하는 것이다.

구체적 방법은 이미 9.19공동성명, 2.13합의, 10.3합의와 2.29합의에 담겨 있다.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5개의 실무그룹, 즉 비핵화, 미·북관계 정상화, 일·북관계 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평화안보체제 문제를 동시 병행적으로 가동하거나 다른 메커니즘을 도입하더라도 그 문제들을 동시 병행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남한, 북한, 미국, 중국 등 4개국이 참여하는 평화포럼이 구성되어 평화체제 협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제재의 완화는 이러한 문제 해결 방식에서 일정한 정도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에 맞추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한국의 안보적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다. 김정일 시대에 북한은 협상을 하면서도 핵무기 개발을 진척시켰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해 신뢰를 상실한 주요 이유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핵무기는 체제 생존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선택된 것이었다. 7차 당 대회에서 확인되었듯이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 능력에 기반을 둔 경제건설 전략을 발전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핵무기는 방위력의 핵심이 되었고 따라서 미국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한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

북한은 미국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핵을 개발했으며 그러한 입장은 체제의 속성상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저변에 깔려 있는 북한의 의도는 체제 공존의 논리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체제방어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었으나 북한은 공존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7차 당 대회에서 ‘연방제’를 다시 강조하면서 서로 다른 이념과 제도의 공존을 강조한 이유다, 물론 통일의 논리로 포장하였지만 북한은 현재의 사회주의체제의 지속을 바라고 있다. 현실적으로 비핵화가 우리의 기대대로 진전되기는 어렵다. 지난 25년 이상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한반도 내외의 국제정세 현실을 볼 때, 평화협정 논의가 비핵화 논의와 함께 진행된다

고 하여 평화협정이 비핵화보다 먼저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 그렇게 하기도 어렵다. 장차 비핵화가 실현되는 것과 거의 동시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북한이 7차 당 대회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제기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주한미군 철수에 관해 한국과 미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다. 핵무기 보유를 배경으로 더 강력하게 제기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임을 북한도 인식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평화협정 문제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며,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의 상황이 도래하기까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것이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의 대미전략의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체제 유지전략이 국가적 과제가 되면서 평화체제 수립은 방어적 차원으로 변했다. 북한의 일관된 주장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없어지게 되며 자연히 비핵화 실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전상태에서는 핵 포기가 불가하며,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포기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이외의 6자회담 참여국이 북한 비핵화에 완전히 합의하고 있다면, 북한을 평화공존의 틀 속으로 견인해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국방 차원의 대응은 이러한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감 있는 대응보다는 항상 방어적이며 사후적이었고, 미국 의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 북한의 핵위협은 보다 강화된 미국의 핵우산 방안을 강구이행하면서 군사적 대응 능력으로 억제하면서, 북한을 국제사회의 틀 속으로 견인해내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전략과 방안의 구사가 요청된다.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 주도적인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P**

토론 1

북핵 위협,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션 1 북한의 핵위협과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토론문

최 종 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지난 8년 “전략적 인내의 비극”

북한의 신념 체계는 핵무기 소형화와 경량화 추구이다. 지난 4차례의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핵무장 안보 신념이 핵능력으로 현실화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만큼 핵문제는 더 복잡해졌다. 그러나 우리의 대북 핵 대응은 퇴행적이다. 대북 확성기는 우리의 빈곤한 대북 대응수단을 상징한다. 우리는 미·일과 한편에 서고, 중국에 “북한을 좀 혼내라”고 이야기할 뿐이다. 이 높은 대외 의존을 우리는 국제 공조라고 부른다. 한편으로 수많은 방송채널에서 온종일 빈약한 대북정보를 가공한 해설과 소설이 난무하여 극도의 안보 불안감을 부추긴다. 북한의 현실화되는 핵능력과 상대적으로 커져만 가는 우리의 대북 무력감은 ‘북한아 망해라’라는 주술만 외우게 한다. 북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해법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어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이 모든 것의 1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다. 북한의 과도한 위협 인식과 폐쇄적 지도체제는 핵무장이 유일한 안전보장이라는 신념 체계를 탄생시켰다. 미국은 정권 안보를 요구하는 북한에 핵폐기를 협상의 전제로 못 박았다. 협상 결과가 되어야 할 북핵 폐기를 협상의 전제로 만들고, 이를 받아들

이지 않는 북한을 제재하고 방치하였다. 이를 전략적 인내라고 한다. 동시에 북한 인권을 문제 삼으며 북한을 완벽한 ‘악마의 국가’로 만들었다. 악마의 국가와의 협상은 더욱 어려워졌다. 방치된 북한의 대외 인식은 자신의 안보를 더욱 비정상적으로 인식하였고, 핵무장이라는 신념 체계를 강화한다.

그러나 지난 8년간의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북핵 불용’이라는 원칙만을 고수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북한의 불량 행동이 거듭될수록 구체성이 결여된 원칙은 교조적으로 변이되었다. 교조적인 북핵 불용은 설득과 예방이라는 외교의 기본 원칙을 불용하였다. 더욱이 북한 급변 사태와 붕괴론에 근거한 한반도 통일 대박론은 북핵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보다는 통일이라는 초현실적 환상을 우리에게 덧씌웠다. 우리는 북한의 핵을 관리하는 데 실패하였다. 2016년 구체성이 결여된 대북 정책에서 벗어나 제재와 압박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북핵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우리는 핵 능력이 강화된 북한과 마주하게 되는 비극적 결과에 직면하게 됐다. 북한은 핵보유 국가이다. 북한 체제는 존속될 것이다. 북한은 새로운 전략과 행동을 끊임없이 보여줄 것이다. 북한은 이번 4차 핵실험 직전에 미국과 긴장을 조성하지 않았으며 중국에 통보하지 않았다. 북한은 핵실험 직후 미국에 위협정책을 폐기하지 않는 한 핵무장은 포기할 수 없다고 못박는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 당장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사이 북한의 핵무장 신념 체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한·미·일 협력체계가 강화될수록 중국에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높아진다. 중국은 북한을 함부로 제재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북핵 문제는 오랜 시간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2. 지난 6개월, 대북제재와 모순

결국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내놓은 대책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 요청, 그리고 미국의 전략자산 도입과 국제 공조이다. 이 네 가지 대응 중 우리만의 대북 압박이나 설득 수단은 찾아볼 수 없다. 그만큼 우리의 자생적 대북 지렛대는 빈곤하고 주변국 의존도는 높아졌다.

4차 북핵 국면에서 국제사회와 한국은 대북한 제재에 매우 단호하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매우 많은 비용을 치르면서 대북제재 선봉에 섰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워낙 단절되어 있어서 우리의 제재가 얼마나 북한에 고통을 초래할지

모르겠다. 오히려 김정은 정권의 결속과 피해자 이미지를 부각시킬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핵무장을 더욱 정당화할 것이다. 이는 지난 7차 당대회를 통해 확인되었다. 단호함만으로 제재가 성공했다는 사례와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 국면의 문제는 북한에 제재 이후의 출구, 즉 유인책을 보여주지 않는 데 있다. 대북제재의 목적이 북한의 비핵화라면, 제재와 동시에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올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선언적 제재보다 6자회담 재개 방안과 같은 섬세한 비핵화 로드맵을 북한에 제시해야 한다. 서방의 이란 제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과 유럽이 지속적으로 협상안을 이란에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대북제재안들이 북한의 비핵화 이상의 그 무엇을 바라고 있다면 염려스럽다. ‘그 무엇’이 북한 혹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라면, 이 제재의 성공률은 낮을 것이다. ‘제재를 위한 제재 정책’이라는 어두운 터널보다 평화적인 비핵화를 위한 예민한 정책이 시급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안 2270을 통해 2가지 메시지를 주었다. 제재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중국에 있다는 것과 또 대화의 의무는 한국과 미국에 있다는 것. 제재의 또 다른 병폐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행의 의지가 점점 약해진다. 제재의 역할은 중국이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으니, 북한의 비핵화의지를 꺾고 6자회담과 같은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은 끌어내는 것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당국은 한국과 미국이 쥐야지만 한다는 것이다.

한·미·일은 3국 공조를 통해 대북 압박 정책을 유지 중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미·일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추진한다. 동시에 한·미·일은 제재를 강조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과 미국에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며 6자회담 재개와 사드 반대를 명확히 했다. 한·미가 원하는 대북 제재 성공은 중국에 달려 있다. 중국의 협력 없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제재와 압박 정책은 성공하지 못하고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국과의 협조는 한·미·일 공조만큼 중요하다. 사드 배치로 미·중 관계가 경색되고 한중관계가 파국으로 갈 수 있다는 대목이다. 그런데 한미일은 군사협력 강화와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다.

대북 제재 구도는 간단하다. 중국의 지속적인 협력 없이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현재의 제재는 성공하지 못 한다. 따라서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중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한미일 군사안보 공조와 함께 사드 배치를 진행하면서 중국에게 대북제재에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매우 비현실적이다.

3.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럴 때, 우리는 북핵을 관리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대북 포용과 교류, 6자회담 재개, 그리고 강압과 억제라는 모든 정책 스펙트럼이 동등히 평가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지난 3년 통일준비위원회보다 ‘한반도 비핵화 추진위’가 있었더라면 북핵에 대응하는 우리의 정책적 상상력이 이렇게 빈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구체성이 결여된 대북 정책을 탈피하고 제재와 압박을 넘어서는 적극적 북핵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3-1. 6자회담 살리기

구체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한미 정책 당국이 지닌 대북 신념체계의 변화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북 관여 Engagement 가 “비핵화의 진전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인식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정치 환경을 고려하면 최고지도자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제재를 통한 북한의 굴복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인식과 함께, “핵무장이 자위적 안전보장책이라고 인식하는 북한을 어떻게 비핵화 시킬 것인가?”라는 비핵화의 근본 문제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가정을 유지해야한다. 이는 가장 어려운 상황을 상정해 놓고, 비핵화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문제의 관건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안전보장 공약과 핵무장을 교환할 의지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비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한미가 제공하는 여러 방안을 논의할 의지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는 북한이 취해야할 비핵화 경로와 6자회담 당사국들이 제공할

상응 조치, 그리고 북한 정권 안보에 대한 안전 보장책들을 최대한 명확히 하여 북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CVID가 최종 목표임이 틀림없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6자회담을 통한 비핵협상이 현 적대적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임을 인식 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북한 급변사태’, ‘통일대박론’, ‘북한붕괴론’과 같이 북한의 존재적 변화를 위협하는 담론 및 정책 캠페인을 중단하고, 평화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세상에 선보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은 과연 북한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6자회담 재개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미, 혹은 한미북중이 낮은 수준의 실무회담을 개최하여, 2012년 2.13 합의의 유효성을 상호 확인해야 한다.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도록 할 수 있으며, IAEA를 통해 북한의 핵시설을 검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어서 우리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인도적 지원 및 제재의 단계적 완화를 고려 할 수 있다. 이러한 1단계 조치가 실행 될 경우, 한국과 미국은 6자회담 재개를 선언하고 6자회담의 목표가 북한의 CVID임을 확인하며, 북한의 동의하에 IAEA 요원들을 통해 북한의 핵시설을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CVID와 북미 수교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Action For Normalization을 현실화 시켜 북한의 대미 위협인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3-2. 한국형 6자회담 살리기

최근 박인휘 교수가 주장한 한국 버전의 ‘평화체제 관련 논리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향후 한국이 북한 문제 및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과 중국이 주장하는 북미관계의 종착역이 평화체제라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식의 논리와 비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평화체제가 중-북의 고유담론이 아니고, 보편적 담론으로서의 평화체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의 정립이 필요하다. 결국, 서울발 정책 변화가 추진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북핵 위협은 건설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 직면에 있다. 미국의 대선과 곧 시작될 한국의 대선 국면에서 얼마나 구체성 있는 대북 비핵화 정책이 나타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P

토론 2

베이커의 ‘조언’: 한반도 비핵평화는 가능한가?

세션 1 북한의 핵위협과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토론문

이 혜 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제임스 베이커(James Addison Baker III, 1930~)는 미국 공화당의 원로다. 포드 정부에서 상무부 차관으로 공직을 시작한 그는 레이건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재무부 장관, (41대 아버지) 부시 정부에서 국무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지난달, 5월 12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세계 속에서 미국의 역할 검토(Examining America's Role in the World)”를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는 “선택적 개입(selective engagement)”을 미국 외교의 좌표로 제시했다. 아래는 미국 외교에 대한 그의 조언을 “한반도 비핵평화는 가능한가?”에 ‘대입’해보는, 하나의 사고 실험이다.

1. 리더십은 군사적 개입과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양자택일의 선택이 아니다. 군사적 개입 없이도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실제 미국은 1945년 이래 선택적 개입을 시행해왔고, 앞으로도 이를 계속 지켜나가야 한다. 선택적 개입의 핵심 요소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미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 지닌 힘의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 “그러나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문제 해결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 (질문) 북한의 비핵화는 한국 외교의 사활적 이익인가? ‘올인’해야 하는 목표인가? 북핵-평화는 불가능한가? 그럼, 현재의 상태는 무엇인가? 북핵-안정/억지? 그 근원은 무엇인가? 북핵의 위협/효과는?

2. 선택적 개입은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장점을 결합한 “실용적 이상주의”다. 선택적 개입은 가치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지만, 어려운 선택과 고통스러운 거래가 불가피한 현실 세계의 복잡성(the complexity of the real world – a world of hard choices and painful tradeoffs)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물론 우리의 원칙과 가치를 마땅히 존중해야 하지만, 우리는 현실세계에서 살아나가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 현실주의의 냉소와 이상주의의 비실용성을 모두 지양하는 “실용적 이상주의”의 이와 같은 균형적 접근을 따르자면, 세상에 쉬운 해법(no easy answers and quick fixes)은 없다.

- “지난 25년 이상의 실패 경험이 미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지만 그래도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 글은 그러한 시도의 하나다.”

-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북한의 핵능력이 증대하면 할수록 한국의 대미 안보의존도는 더 높아지고 안보 자율성을 확보할 기회는 좁아지게 될 것이다.”

- “그렇다면 대안은 북한의 체제안전보장, 즉 북한의 피포위 의식을 완화할 수 있는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비핵화와 ‘실질적으로’ 맞바꾸도록 하는 방법이 현실 가능한 최선의 방법이다.”

- “북한을 국제사회의 틀로 견인하는 ‘상응전략’과 ‘포괄적 관여전략’을 혼합추진하는 것이다. 구체적 방법은 이미 9.19공동성명, 2.13합의, 10.3합의와 2.29합의에 담겨 있다.”

- (질문) 한미동맹과 평화협정의 관계는? 동맹-평화-통일의 삼위 불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포스트 후쿠시마의 일본사회: 용용하는 원전국가, 용기하는 시민사회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1. 서론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동북부를 강타한 지진과 이에 이은 쓰나미는 지진에 익숙한 일본인에게도, 일찍이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예측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는 제어 불가능 상태에 빠져 폭발한 뒤 화염에 휩싸였다. 인간이 확보한 안전이라는 것이란 겨우 ‘예측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안전에 불과했던 것이다. 대지진과 쓰나미는 한 순간에 마을과 거리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버렸고,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기괴한 풍경을 일본의 동부 해안가 도시들 위에 펼쳐놓았다. 거기에 원전사고가 중첩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잃었지만, 무엇보다도 슬픈 일은 되돌려 놓을 과거를 잃었다는 사실이었다.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사각형 상자가 잔해를 드러내고 하얀 연기를 내뿜는” 사진 같은 영상을 보고, 사람들은 “어떠한 이해와 판단도 불가능한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고, 바로 직후에는 이미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는 것을 (중략) 깨달았던 것”이다.¹

30년이 지난 체르노빌의 비극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듯이, ‘겨우’ 5년이 지난 후쿠시마의 비극도 현재진행형이다.² 2016년 2월 15일 후쿠시마현이 원전 사고 당시 18세 이하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민건강조사 발표에서, 갑상선암으로 확진된 사람이 100명을 넘어 전국의 갑상선암 발병률에 기초한 추계를 대폭 상회했다. 검토위원회는 전국 평균에 비해 ‘수십 배 많은 갑상선암이 발견되고 있다’고 그 심각성을 인정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의한 방사선의 영향에 대해서는 ‘연관짓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현단계에서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현 내의 시군 단위 인구밀도당 발생수로 이 수치를 재배치해 보면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서 발생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원전사고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³ 도호쿠지방과 간토지방에서 백혈병 발병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수치가 보고되는 가운데, 2015년 10월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 작업에 종사한 뒤 백혈병을 일으킨 40대 남성에게 ‘피폭과 질병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여 근로재해를 인정했다.⁴ 후술하겠지만 작업에 동원되어 피폭당한 주일미군 병사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⁵

사고로부터 5년이 지난 현재도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반경 20킬로미터권 이내는 귀환곤란지역, 거주제한구역, 피난지시해제 준비구역 등으로 채워져 있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거주제한구역이 30킬로미터권 밖에도 펼쳐져 있다.⁶ 지금도 이들 지역에서는 오염제거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지금도 투입되고 있다. ‘후쿠시마 부흥 스테이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해체와 철거)는 이르면 2040년, 늦으면 2050년에 가능하다는 시산을 하고 있으며,⁷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손해와 오염 제거, 배상, 그리고 폐로 등에 드는 손해액은 11조엔을 넘을 것이라는 시산이 있다.⁸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수습을 위해 ‘소련의 1년 국가 예산’이 체르

1 「編集後記」, 『現代思想』, 2012년5月号, 246.

2 「チェルノブイリ, 30年目の春風」, 『世界』, 2016년5月号.

3 <http://www.sting-wl.com/fukushima-children8.html> (최종 검색일, 2016.6.6.)

4 『日本経済新聞』, 2015.10.21. http://www.nikkei.com/article/DGXLASDG20HBA_Q5A021C1CR8000/ (최종 검색일, 2016.6.6.)

5 『朝日新聞』 2016.5.19. <http://www.asahi.com/articles/ASJ5K354LJ5KPTIL00B.html> (최종 검색일, 2016.6.6.)

6 ふくしま復興ステーション, <http://www.pref.fukushima.lg.jp/site/portal/list271-840.html> (최종 검색일, 2016.6.6.)

7 ふくしま復興ステーション, <http://www.pref.fukushima.lg.jp/site/portal/03-more.html> (최종 검색일, 2016.6.6.)

노빌에 쏟아 부어졌으며 이 경제적 부담은 소련의 붕괴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후쿠시마의 비극은 일본 사회를 거대한 전환의 입구에 세워 놓았다.

지진이나 화산 등 커다란 자연재해가 인간 사회의 대변동을 초래한 사례를 인류사에서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일본사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허다하게 발견된다. 그중 오래된 사례로 가마쿠라 시대의 ‘헤이젠몬의 난(平禪門の乱)’이 있다.⁹ 일본사에서 대지진으로 인한 사회변동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 기록되고 있는 것은 간토대지진이다. 사망자와 행불자는 10만 수천 명에서 14만 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대지진으로 도쿄는 완전히 그 모습을 바꿨다.¹⁰ 대지진과 사회변동의 상관성을 생각할 때, 가장 비근한 사례로 6433명의 사망자가 나온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있다. 고베에서 지진이 일어난 1995년은, 현대 일본사에서 ‘자원봉사자 원년(ボランティア元年)’으로 기록되고 있다.¹¹

그러나 3.11 이후의 풍경은 간토대지진이나 한신/아와지대지진 이후의 풍경과 무언가 다르다. 그것은 원전의 폭발이 가져온 차이다. 동일본대지진 이후에는 재생과 복구, 부흥 등에 대한 논의 이전에 가치관의 근본적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논설이 눈에 많이 띄었다. 메이지유신, 패전에 이어 제3의 가치관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는 인식이었다.¹² ‘전후’의 시대가 지나가고 ‘재후’의 시대가 왔다는 시대인식이 바로 그것이었다.¹³ 이러한 시대인식은 3.11 이후의 복구/부흥이 다양한 점에서 ‘새로운 국가 건설’을 의미한다는 인식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새로운 나라로의 변화가 3.11 이전에도 일어나고 있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3.11은 ‘우발적 필연’이라는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3.11 이전과 이후는 전전과 전후만큼이나 다른 시대가 될 것으로 보였다.¹⁴ 그렇다면, 3.11로 인해 재생 불가능한 과거가 되어 버린 ‘낡은 국가’는 무엇이었는가?

8 NHK News Web, 2014.3.11. http://www3.nhk.or.jp/news/genpatsu-fukushima/20140311/1516_songaigaku.html (최종 검색일, 2016.6.6.)

9 호조 사다토키(北条貞時)가 다이라노 요리쓰나(平頼綱) 등 90여명을 살해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간토(関東) 지방에서 2만 3천 여명이 사망했다고 전해지는 1293년의 지진 때문에 일어난 집단 히스테리로 간주된다. 寒川旭, 『地震の日本史』, 2007, 62-63.

10 筒井清忠, 『帝都復興の時代—関東大震災以後』, 中央公論新社, 120.

11 柳田国男, 『阪神・淡路大震災10年—新しい市民社会のために』, 岩波新書, 88-107.

12 湯浅誠, 『世界』, 2011년6月号, 123.

13 御厨貴, 『「戦後」が終わり, 「災後」が始まる』, 千倉書房, 2011년.

14 御厨貴, 『「戦後」が終わり, 「災後」が始まる』, 『中央公論』, 2011년5월.

2. 3·11이 드러낸 일본 국가의 현실, ‘원전국가’

그것은 ‘원전국가’라고 하는 국가체제였다. ‘원전국가’란 ‘국민의 생활과 기업의 생산에서 원전의 존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일본은 ‘원전국가’라고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원전의 수에서 2011년 3월 시점에서 일본은 104개의 미국, 59개의 프랑스에 이어 54개로 세계 3위(4위는 31개의 러시아, 5위는 20개의 한국이었지만, 국토 면적을 원전수로 나눈 단위면적으로는 6,999로서 세계 제2위, 인구밀도당 원전 수는 제1위였다.(참고로 한국이 단위면적당 1위, 인구밀도당 2위였다)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원전의 비율은 30% 정도로 80%의 프랑스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의 미국, 15%의 러시아보다는 높았으며, 한국도 30%로 비슷한 비율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볼 때 일본은 ‘원전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전국가’는 이러한 양적 규모에 의한 개념설정이 아니며, 다음과 같이 국가의 존재 방식의 근간을 문제 삼는 개념이다.

‘원전국가’의 물질적 기초인 ‘원전’은 일본에서 1966년 도카이무라(東海村)에서 최초의 발전로가 가동된 데 이어, 1970년대에 20개, 1980년대에 16기, 2000년대에 5기 등의 추세로 증가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이 산업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국가의 중핵에 원자력으로 총괄되는 견고한 구조’가 출현하는 것을 동반하는 과정이었다. 이를 무토 이치요(武藤一羊)는 ‘원전 체제(原発レジーム)’라는 용어로 포착했으며,¹⁵ 요시오카 히토시(吉岡斉)는 ‘원자력국가’라고 부르고 있다.¹⁶

‘원자력국가’라는 용어는 요시오카의 발명품이 아니다, 이는 1977년 서독에서 출판된 로베르트 융크(Robert Yungk)의 저서 ‘*Der Atomstaat*’에서 따온 것이다.¹⁷ 일본에서의 반응은 비교적 빨랐다. 잡지 『기술과 인간(技術人間)』 7호 6권(1978.6.)이 ‘원자력과 관리사회’라는 제목으로 짠 특집 가운데 융크와의 인터

15 武藤一羊, 『潜在的核保有と戦後国家—フクシマ地点からの総括』, 社会評論社, 2011년, 46-47.

16 吉岡斉, 『脱原子力国家への道』, 岩波書店, 2012년, 98-117.

17 Robert Yungk, *Der Atomstaat. Vom Fortschritt in die Unmenschlichkeit*. Kindler, München 1977.

류를 게재하고 있다. 원자력국가는 필연적으로 원자력의 완전관리를 위해 경찰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논지에 공감하는 내용이었다.¹⁸ 일본에서 이 책은 『원자력제국(原子力帝国)』이라는 제목으로 1989년에 번역되어 나왔다.¹⁹

네그리도 2013년 4월 6일 일본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3.11 이후의 일본을 위기에 빠진 ‘원자력국가(stato nucleare)’라고 정의했다. 네그리는 스스로 ‘핵무기에 의한 지배(potenza nucleare)’와 구별된 ‘원자력국가’의 존재를 언급하며, 일본은 비록 ‘포텐자 누클레아레’는 아닐지언정 ‘스타토 누클레아레’이며, 이는 ‘절대적 파괴력의 과잉탑재(sovra-carica)와 중층적 결정(sovra-determinazione)을, 자신의 주권의 형태로 장비하는 국가’라고 정의했다. 조금더 풀어서 말하자면 테크놀로지를 장비함으로써 주권은 물리적인 요소가 되며, 경찰력과 군사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 이러한 특수한 내용의 형상이 갖는 공포의 이미지가 ‘원자력국가’의 정의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원자력과 관련한 정책이 일부 권력에 독점되어 국민 일반이 스스로의 주권의 행사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기 어려운 구조가 원자력정책에 드러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개념이며 정의라 할 수 있다.²⁰

일본에서 이 구조는 ‘원전촌(原発村)’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었다. 그것은 ‘경제산업성, 전력업체, 지방자치체 관계자, 원자력산업, 정치가집단, 미국정부 관계자’ 등 6자를 주역으로 하고, ‘학계와 언론계’ 등 2자를 조연으로 한 ‘핵의 8면체 구조’로서, ‘내부자의 이해 조정에 기초한 합의에 따라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²¹ 이것을 요시오카는 ‘국책공동체’로서의 ‘원자력공동체’로 명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원전촌(원전마피아, 原発村・原子力村)’이라 불리는 것의 정체이다.²²

그러나 이러한 체제를 ‘원전촌’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은 원자력 문제를 에너지 문제로 수납해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지적하면서 무토는 요시오카를 인용하면서, 일본의 원자력정책 속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원자력의 공리’ 즉, ‘원자력은 국가이다’는 국시가 있음을 발견하고, 원자력과 안보, 원전과 기지가 연계(linkage)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원전’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 체제를 ‘원전 체제’라고 부르고 있다.²³ 더구나 ‘원자력은 국가이다’는 국시는 원

18 ロベルト・ユンク, 「特別インタビュー原子力国家」, 『技術と人間』 7巻6号, 1978年6月, 29-39.

19 ロベルト・ユンク(山口 祐弘訳), 『原子力帝国』, 社会思想社, 1989.

20 アントニオ・ネグリ, 「マルチチュードの現在」, 『現代思想』, 41巻9号, 2013年7月, 42.

21 吉岡 齊, 76-94.

22 武藤一羊, 47.

자력 에너지 정책의 전개 과정에서 획득된 경험지(後知恵)가 아니라, 원자력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최초의 단계에서부터 전면에 내걸렸던 구호였다.²⁴ 국시에 원자력이 자리 잡은 국가, 그것을 ‘원전국가’라 부를 수 있다.

나아가 바로 이 ‘원전국가’의 속성이 미일동맹과는 별개로 대미의존을 심화시켜온 요인이 되었다.²⁵ 또한 원전 건설은 일본의 ‘주변’에 집중되어, ‘국내 식민지화’의 문제, 즉 해체되지 않고 ‘변형되어 유지되는 제국’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말로 설명하면서, ‘평화헌법’이 규율해 온 전후체제 속에 안착시켜 왔다. 이러한 구조를 간파한 무토는 ‘전후국가’를 지탱해 온 세 개의 원리로 ‘대미의존원리’, ‘제국계승원리’, ‘평화헌법원리’를 들고 있다.²⁶ ‘원전국가’ 속에 이 세 개의 원리는 고스란히 체현되어 있다. 그 ‘원전국가’가 3.11. 이후 ‘융해’되고 있다.

3. 융용하는 ‘원전국가’

(1) ‘원전국가’의 융용

후쿠시마 제1원전이 수소폭발을 일으켜 연료봉이 융용하는(녹아내리는) 모습에서, 많은 일본인이 원전에 의존해 온 전후 국가, 즉 ‘원전국가’의 융용을 보고 있었다. 반전평화를 주장해 온 국제주의자 무토 이치요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후 일본이라는 국가를 지탱해 온 미국의 패권원리, 헌법의 평화원리, 제국 계승의 원리 등 세 개의 원리가 후쿠시마에서의 사고를 계기로 상호 모순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전후 일본의 국가체제 그 자체가 붕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²⁷ 동시에 많은 일본인이 3.11 이후의 풍경에서 패전 직후 초토화된 일본의 모습을 겹쳐 보며, 전전의 ‘군국국가’가 전후에 ‘원전국가’로 모습을 바꿔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후 일본은 ‘원전이라는 희생의 시스템’ 위에 건설된 ‘토건국가’로서, “경제성장과 산업주의라는 국책에 흠뻑 젖어 제동장치가 작

23 吉岡齊, 127.

24 槌田敦・藤田祐幸他, 『隠して核武装する日本』, 影書房, 2007年; 武藤一羊, 41, 47-48.

25 吉岡齊도 이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제6장, 120-140.

26 武藤一羊, 205.

27 『한겨레신문』, 2012.9.18.

동하지 않는 채 유지되고 있었다”. 그의 결론은 근대(문명) 비판으로 귀결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일본의 근대를 열었던 ‘후쿠자와의 사상’으로부터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는 인식으로 나아가고 있다.²⁸

일본의 철학자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은 한신/아와지대지진이 ‘경제대국’ 노선의 몰락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동일본대지진은 그 궁극적 파탄을 드러내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신/아와지대지진 이후 일본은 전후일본의 국가노선을 채택해 온 노선을 수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락으로부터의 재기를 꿈꾸고 ‘저팬 애즈 넘버 원’의 시대를 되찾겠다고 하여 역방향으로 달려 왔으며, 이후 일본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전면화되었다. 그러나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나기 얼마 전부터 일본에서는 일본의 경제적 몰락의 징후에 대한 체감이 널리 확산되고 있었다. 이러한 체감으로부터 새로운 경제와 시민사회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던 분위기에서 일어난 것이 동일본대지진이었다. ‘한신대지진에서 간과된 문제를 재확인하는 것’이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과제였다. 그것은 붕괴하기 시작한 ‘토건국가’, 용융하기 시작한 ‘원전국가’의 처리로부터 시작될 일이었다.²⁹

실제로 3.11 이전부터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구체성을 띤 경고들이 나오고 있었다. 3.11이 일어나기 석달 전에 발행된 사회비판 월간지 『세카이(世界)』의 2011년 신년호 특집은 ‘원자력부흥이라는 위험한 꿈’이었다. 특집에는 2010년 9월 18일, 독일정부의 원자력발전가동연장법안에 대한 반대하는 독일시민 10만명의 데모대열 사진이 게재되어 있었다. 특집의 메시지는 간결했다. 쉽게 ‘원전 르네상스’에 기대려고 하는 민주당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있었던 것이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와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반원전 시민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나라에서 원전 건설계획이 동결되고, 원전 건설에서 철수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지구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CO2 배출량을 규제하자 클린 에너지로서 원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이후 ‘원자력 르네상스’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듯했다. 일본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볼 수 있어서, 민주당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어도 원전 정책은 방향이 수정되지 않은채 성장전략의 일환으로서 신흥국에 대한 원전수출을 정권에 대한 지지기반의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원전 수출은 디스플레이션 속에서 쇠락하고 있던 일본경제를 기사회생시킬 묘

28 石橋克彦, 『世界』, 2011년8월, 114-119.

29 柄谷行人, 『現代思想』, 2012년5월호, 23-25.

약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2010년 10월 31일, 간 수상은 베트남의 응웬 수상과 하노이에서 회담하고 베트남이 계획하고 있던 100만 킬로와트급 원전 2기의 건설을 일본이 수주하는 데 합의했던 것이다. UAE에서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린 이후 일본은 원전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국책회사 ‘국제원자력개발(주)’를 설립할 정도로 원전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진두지휘했던 것이 경제산업성이며, 정부가 설립한 산업혁신기구와 9개 전력회사, 그리고 도시바, 히타치제작소, 미츠비시중공업 등 원전 제조회사 3사가 함께 2억엔을 출자한 회사였다.³⁰ 이것은 자민당 시대에 만들어진 정치가-관료-재계의 철의 3각형이 재현된 것이었다. 민주당 정권이 되어서도 ‘토건국가’는 ‘원전국가’로 계승되고 있었던 것이다.

(2) 미일동맹의 상징, ‘원전국가’

‘원전국가’가 노정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그것이 미일동맹의 상징이라는 점이다. NHK가 1994년 3월에 방영한 『원전도입의 시나리오(原発導入のシナリオ)』라는 다큐멘터리는 원전이 미국으로부터 일본에 도입된 경위와 이유, 인맥 등을 밝혀주고 있다. 원전 도입의 경위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950년대 중반 소련과 치열한 핵개발경쟁을 벌이고 있던 미국은 태평양의 비키니 환초에서 수폭실험을 실시하고 있었다. 1954년 3월 캐슬작전의 브라보 실험에서 근방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원양 참치어선 제5후쿠류마루(第五福竜丸)가 피폭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 전국에 원수폭 금지운동이 일어나 반미감정이 고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핵폐기가 아니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시혜국이 되어, 원자료를 동맹국 일본에 설비하는 것으로서 이 위기를 넘겼던 것이다.³¹ 3.11 후에 주일미군이 출동해서 전개된 ‘도모다치 작전(Operation Tomodachi)’의 원경에는 이러한 경위가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도모다치 작전’의 근경에는 하토야마 내각 이래 지펴오르고 있던 ‘미일동맹의 불안정성’이라는 불씨가 있었다. 케빈 메어 미 국무성 일본 본부장이 “오키나와 현민은 앵벌이 명인”이라고 발언한 것 때문에, 오키나와현 의회가 항의결의를 전원일치로 채택했던 것이 3월 8일이었다. 10일에는 캠벨 미 국무차관보가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무상에게 사죄했고, 지진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 다음날이었다. 루스 주일대사는 취임중인 미 대통령을 깨워 초동 대응에 대해 논

30 『世界』, 2011년1月号.

31 「メディア批評」, 『世界』, 2011년9월.

의했다고 한다.³² 미 제7함대의 원자력항보 ‘로널드 레이건’을 주축으로 항모전투 군단이 미야기현 연안에 전개했다. 함정 19척, 인원 1만 8000명, 항공기 140기가 집결했다. 미군은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부터 80킬로미터권 밖의 지역에서 작전을 전개했다. 후쿠시마현에 전개한 미군은 그 일부였다.³³ 한편 미군은 주일미군 가족 7,500명을 귀국시켰으며 요코스카항을 모항으로 하는 ‘조지 워싱턴’을 일본해에 대기시키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미야기현 연안 도시에서의 구호 복구 활동에 동원되었다. 주일미군의 구호활동은 언론의 화려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언론은 미일협동의 ‘상징’이 되는 장면들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³⁴

이처럼 ‘도모다치 작전’은 미일의 군사적 협력관계를 높이는 방향에서 활용되었다.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은 ‘도모다치 작전’이 “자위대와 미군의 통합용과 민간공항 및 항만의 미군 사용에 길을 열어주었고, 그 실제 내용은 ‘유사사태 대응 시뮬레이션’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작전의 성질은 다르지만, 민간시설 이용과 상륙 등 실태로서는 한반도 유사사태를 상정한 훈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도모다치 작전’은 ‘유사’시 미일협동의 대응태세를 때마침 일어난 대지진을 틈타서 ‘점검하고 시험’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사히신문(朝日新聞)』도 이 사태를 ‘유사시에 준한 작전 조정 일체’였다고 표현하고 있다. 일본에서 ‘도모다치 작전’의 ‘성과’가 감동적인 에피소드로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오키나와) 후텐마 비행장의 지리적 우위’나 ‘(주일미군) 해병대의 존재의의’에 대해 강조하는 언설들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에 대해 류큐신문이나 오키나와타임즈는 ‘강한 위화감을 느낀다’며 ‘대지진의 정치적 이용’에 반발하고 있었다.³⁵ 원전과 기지가 긴밀히 연결된 문제임을 상징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³⁶ 2011년 11월 10일, 일본 내각부의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친근감은 ‘친밀함을 느낀다’고 한 사람이 82.0%로 과거 최고를 보였다. 반대로 ‘친밀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15.5%로 과거 최저를 기록했다.

자위대에 대한 국민의 인상도 개선되었다. 2012년 1월 내각부의 ‘자위대 및

32 『読売新聞』, 2011.4.13. ; 『世界』, 2011년7월, 119.

33 그럼에도 후쿠시마에서의 진화 작전에서 미군이 입은 피해는 심각했다. ‘도모다치 작전’에 동원되어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피폭당해 도쿄전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일으킨 미 해군병사는 400명에 달했다. 부시와 함께 미일동맹의 밀월시대를 구축했던 고이즈미 전 총리가 이들의 호소에 눈물을 흘리며 귀를 기울였다는 보도는 미일관계의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朝日新聞』 2016.5.19. <http://www.asahi.com/articles/ASJ5K354LJ5KPTIL00B.html> (최종 검색일, 2016.6.6.)

34 『世界』, 2011년7월, 119.

35 『世界』, 2011년7월, 121.

36 『世界』, 2011년7월, 119.

방위문제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위대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사람은 91.7%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나쁜 인상을 갖고 있다'는 사람은 5.3%로서, 최저를 기록했다. 이보다 전에 최저를 기록했던 것은 2006년 2월 조사로 10.0%였다. 바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사람은 80.9%에서 91.7%로 급증했다. '원전국가'가 용용하는 가운데, '새로운 국가 건설'의 미래상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여백을 '국가'와 '민족'의 상징체계가 매우려 하고 있었다.

(3) 용용하는 '원전국가'의 뒤에 오는 것

보수논객 사토 마사루(佐藤優)는 3.11 직후의 논설에서 미우라 아야코(三浦綾子)의 『시오카리고개(塩狩峠)』를 인용하여, 자기희생을 통해 승객을 구한 철도 직원 나가노 노부오(永野信夫)에게서 '사상이 곧 행동이며, 행동이 곧 사상(思想即行動, 行動即思想)'이라는 인격의 원형을 발견해 내고 있다. 3.11 이후 일본인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예상범위' 밖에서 일어난 자연의 경이를 초극하는 사상이라고 하여, '야마토고코로(大和心, 일본인 전통의 심성)'에서 발현되는 '용감함(ををしき)'으로 합리주의와 생명지상주의, 개인주의를 초극하는 것이 일본 국가와 일본 민족의 생존을 위해 요청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⁷

여기에서 미우라 아야코와 사토 마사루의 사이에 개인과 공동체의 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미우라의 『시오카리고개』는 실제로 1909년에 일어난 철도사고를 소재로 한 것으로, 기독교 신자인 주인공이 자신의 몸을 철로 위로 던져 승객을 구하는 내용의 소설이다. 여기서 주인공은 철저히 개인의 내면에 자리잡은 신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삶을 승화시키는 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토는 자기희생의 모티브만 따 와서 이를 '야마토고코로'의 '용감함'으로 치환하고, 여기에서 '개인주의'의 초극을 일본 국민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이자 비평가인 이노세 나오키(猪瀬直樹)는 더욱 직접적으로 '전후'의 청산과 이를 통한 '국가'의 자립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정치학자 미쿠리야 다카시(御厨貴)도 가세했다. 이들이 말하는 전후란 무엇인가? 이노세는 에토 준(江藤淳)의 전후 인식에 기대고 있다. 에토는 오래 전부터 민주주의와 평화의 시대로서의 '전후' 인식을 부정해 온 작가로, 일본의 보수 우익의 역사인식을 대표해 왔다. 에토가 정식화한 전후란, 미국과 자민당, 사회당의 3자 사이의 묵계, 즉

37 佐藤優, 「大震災と大和心のををしき」, 『中央公論』, 2011년6월.

‘교전권부인의 합의’ 하에서 “일본 고유의 주권에 대한 구속과 제한”이 가해지던 시대이다.³⁸ 필자는 이러한 일본 국가의 존재 방식을 ‘기지국가’로 부른 적이 있다. 그 의미와 함의에 대해서는 결론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지만, 여기에서는 다만 ‘전후국가’의 붕괴, 즉 ‘원전국가’의 용용의 반동으로, ‘국가’와 ‘민족’의 대합창이 들려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역설적 상황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3.11. 이후 각종 주간지, 종합잡지의 대지진 특집호의 표지에는 ‘힘 모아 마음 모아(力を一つに, 心を一つに)’, ‘힘내자, 닛폰(がんばろう, 日本)’, ‘포기하지 말자(負けるな, 日本)’, ‘국난을 극복하라(国難を乗り越えよ!)’는 구호가 현란하게 나부꼈다. 3.11 극복의 전선에 국가가 대거 소환되고 있었다.

4. 융기하는 시민사회

(1) 사적인 것을 지키는 싸움

곤경에 처해있는 사람에게 힘내라는 응원은 그 자체로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일본어에서 ‘감바로 정신(がんばろう精神)’을 의미하는 가타카나 영어 ‘감바리즘(ガンバリズム, gambarism, fighting spirit)’은 일본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히 노력하여 곤경을 극복하는 인성으로 존중받아 왔다. 한신/아와지대지진으로 부터의 복구에서도 ‘감바리즘’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감바리즘’이 집단을 향할 때, 때때로 이는 개인에 대한 폭력이 되기도 한다. 일본의 철학자 나가시마 요시미치(中島義道)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³⁹ “‘일본인’에 시점을 고정시킬 때, 개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게 된다. ‘감바로 닛폰!’이라는 응원 속에서 개인은 매몰되어버린다. 숫자의 위력 앞에서 ‘대체 불가능한 개인’에 대한 시선은 초점을 잃는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는 ‘보편주의’를 개인에게 강요한다. 그것은 ‘법적으로 승인되어’ 안심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에만 응집되기 때문이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 해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 예컨대 성소수자나 불륜관계에 있는 남녀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적 배려가 미치지 않는다. 아무리

38 江藤淳, 『日本の信義—一の巨星十人と語る』, 猪瀬直樹・御厨貴, 「対談, 今こそ『戦後』を清算し, 『国家』を語れ」, 『中央公論』, 2011년 7월.

39 中島義道, 「『がんばろう日本』という暴力」, 『新潮45』, 2011년 6월.

본래 좋은 의미를 가진 말이라 해도, 그것이 구호가 되어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반복되게 되면, 그 의미가 퇴화하여 일종의 폭력장치가 되어 버린다.”⁴⁰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는 ‘철학의 부재’ 현상이 나타난다. 나카지마는 기하학적 정신에 섬세한 정신을 대립시킨 파스칼을 인용하여, ‘섬세한 정신’에 의한 ‘정론에 대한 회의’를 부흥의 도정에 개재시키려 했다. ‘기하학적 정신’이란 논리적으로 명석한 언어를 구사하여 표현하는 정신이며, ‘섬세한 정신’이란 복잡하고 모순에 차 있으며, 선을 바라면서 악에 매몰해 가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한 정신 활동을 유지하려는 정신으로 설명된다. 그것은 또한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는 현실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 정형에 맞추려는 경향에 대해 과민할 정도로 경계하는 태도, ‘정답’을 바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은 없을 수도 있다’는 태도에 의식적으로 머물러 있으려는 정신이다.⁴¹ 나카지마는 ‘감바로’라는 구호 속에서 ‘국가’를 전면에 등장시키려는 분위기를 경계하고 있었으며, 이 ‘국가’가 다시 ‘원전국가’로 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려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3.11. 직후 처참한 광경 속에서, 조용히 질서를 지키고 있던 일본의 시민사회를 세계는 경탄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세계적 상식(?)’에서 봤을 때 불가사의한 현상에 대해, 당시 기예의 신진 역사학자로 논단에 등장했던 요나하 준(与那覇潤)은 그의 저서 『중국화 하는 일본(中国化する日本)』이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즉 그는 “3.11 후에 사람들이 ‘자력구제(전형적으로는 약탈)’에 나서는 일 없이 현대판 ‘성곽’, 즉 초등학교나 공민관에 대피할 수 있었던 것은, 영주들의 전쟁이 빈발했던 전국시대에 기원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막상 재해가 일어났을 때 지역사회가 혼돈에 빠지지 않고, 통치기구를 신뢰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고 설명했다.⁴²

그러나 온순했던 ‘성 아랫마을 사람들(城下町の町人たち)’은 언제까지 마냥 순종적이지 않았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그들에게 안전한 성곽을 제공했던 ‘전후 국가’는 용용하고 있었으며, 신뢰할 만한 통치기구가 없었다. 그런 가운데 무너지고 있던 것은 지역사회의 질서가 아니라, 개개인의 생활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벌거벗은 채 국가와 대치하게 된 사적인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⁴³

40 中島義道, 132-134.

41 中島義道, 137.

42 与那覇潤, 78.

43 『現代思想』, 246.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지에서는 의식주 모든 ‘사적인 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의복의 자유와 거주지 안심을 잃은 데 더해, 쌀과 야채, 육류와 어패류 등 모든 식재료가 의심스러워졌다. 일본인의 마음이 불안에서 분노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내부피폭에 노출된 소고기에서 규제치를 크게 웃도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일이었다. 2011년 7월 도쿄도 중앙도매시장이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南相馬市)의 긴급시 피난준비 구역으로부터 시바우라(芝浦) 도축장에 반입된 소 11 마리 가운데 1 마리의 식육에서 식품위생법 상의 잠정 규제치인 500벵크렐/킬로그램을 훨씬 상회하는 2,300벵크렐/킬로그램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으며, 이어서 실시된 검사에서 나머지 10마리의 식육으로부터도 규제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다.

오염원은 출하 농가에서 소의 사료로 사용하던 벼짚이었으며, ‘내부’ 피폭에 해당하는 사례였다. 벼짚은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했을 때 옥외에 있었으며, 검사 결과 고농도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었던 것이다. 벼짚 오염도 ‘예상 밖’의 일이었다.⁴⁴ 소고기는 참는다해도, 생선은 일본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단이였다. 그런데 여기서도 안심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인이 좋아하는 참치 등 회유하는 물고기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⁴⁵ 사람들은 공적 영역의 재구축을 위해 ‘감바리즘’을 발휘하기 보다는 ‘사적인 것을 지키는 싸움’에 나서기 시작했다. ‘감바로’ 대신에 ‘사요나라’를 외치면서.

2012년 7월 16일, 요요기공원에는 17만 명이 모여, ‘사요나라 원전’을 외쳤다. 이정도 규모의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60년 안보투쟁’ 이래 과반세기(52년)만의 일이었다.

(2) 여론조사: 희망과 현실, 그리고 다시 희망

그렇다면 3.11 이후 원전에 관한 여론 일반은 어떤 것이었는가? 우선 3.11 이전의 여론조사부터 보기로 하자. 2007년의 『아사히신문(朝日新聞)』 여론조사에 따르면 원자력의 전면 폐쇄에 찬성하는 사람이 7%,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1%, 현상유지를 원하는 사람이 53%, 증설에 찬성하는 사람이 13%였다. 그런데 같은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이 대지진 직후인 4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원전에 부정적인 의견으로서 전면 폐쇄 찬성이 11%, 감축에 대

44 北林寿信, 「日本を揺るがす稲わら—牛肉汚染」, 『世界』, 2011년9월, 158.

45 水口憲哉, 「まぐろと放射能」, 『世界』, 2011년9월.

한 지지가 30% 등,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고가 미친 충격의 크기에 비하면 극적인 증가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현상유지에 대한 지지는 51%로 거의 같았으며, 증설에 대해서는 5%가 찬성했다.⁴⁶

그러나 원전 폭발 사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2011년 6월 11일과 12일에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서 장래에는 그만둬야 한다’는 데 74%가 찬성하고 14%만이 반대하고 있다. ‘전기 요금이 비싸진다고 해도,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자연 에너지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65%가 지지했으며,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19%였다. NHK가 실시한 2011년 11월의 조사에서도 70%의 일본인이 전면 폐쇄, 또는 단계적 삭감을 선택하는 등 변화가 확인되었다.⁴⁷

교도통신(共同通信)의 조사와 FNN의 조사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원전 사고 이후 가장 빨리 실시된 여론조사로 교도통신의 여론조사를 들 수 있다. 3월 26-27일에 실시된 조사에서 ‘줄여나가야 한다’와 ‘즉시 폐지’의 합계가 46.7%, ‘증설’과 ‘현상유지’의 합계가 46.5%로 원전의 유지/폐지에 대해 양분된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⁴⁸ 주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TV 매체 FNN의 여론조사에서도 초기의 여론은 비슷한 것이었으나 원전사고 이후 4개월 만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여론조사의 질문은 ‘현재 일본의 전력의 30% 가까이가 원자력발전에 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국내 원자력발전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대답으로 제시된 선택지는 다음의 다섯 가지였다. 늘려야 한다, ‘증설(A)’, ‘현상유지(B)’, ‘삭감(C)’, ‘전면 폐쇄(D)’, ‘잘 모르겠다/말할 수 없다(E)’ 등이다. 사고발생 1개월 남짓 후인 2011년 4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친 조사에서는 A=4.2%, B=48.5%, C=33.3%, D=10.5%, E=3.5% 였다. FNN은 산케이신문의 계열사로 보수적인 시청자의 태도가 반영된 것이었는지, 이 조사에서 증설에 찬성하거나 현상유지를 원하는 사람은 과반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래도 ‘삭감’이나 ‘전면 폐쇄’를 선택한 사람도 43.8%였다.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5월 28-29일의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역전되었다. A=2.7%, B=33.3%, C=48.9%, D=12.6%, E=2.5%로, 증설 또는 현상유지에 대한 찬성은 36%, 삭감이나 전면 폐쇄에 대한 찬성은 61.5%가 되었

46 Matthew Penney, “Nuclear Power and Shifts in Japanese PublicOpinion”, *Japan Focus*

47 Matthew Penney, *ibid.*

48 『共同通信』, 2011.3.27.

다. 2011년 7월 23-24일의 조사에서는 선택지가 6개로 늘어났다. A와 B는 같지만, C는 ‘삭감하되 남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으며, D는 ‘단계적을 삭감해서 전면 폐쇄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E는 ‘가능한 한 빨리 없애야 한다’는 것, F는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A=1.2%, B=13.4%, C=31.5%, D=42.0%, E=9.7%, F=2.2%였다. 신설에 대해 찬성하거나 현상유지를 합쳐도 14.6%에 지나지 않았으며, 축소운영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30%가량, 그리고 과반인 51.7%가 폐지를 선택함으로써, 보수적인 일본인 사이에서도, 다수가 원전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⁴⁹

민간 조사연구기관인 일본리서치센터의 여론조사 결과는 더 비판적인 것이었다. 조사는 2011년 5월, 7월 9월, 2012년 3월 등 4번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원자력 이용에 반대하는 의견이 증가하는 경향에 있으며, 2011년 5월의 최초 조사에 비해 2012년 3월의 조사에서는 10% 포인트 이상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는 의견이 증가하여 과반수를 넘어서고 있었으며, 찬성하는 의견은 30%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제대로 잘 관리된다면, 원자력발전은 안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한 반대가 2011년 5월에 36.1%였던 것이 2012년 3월에는 52.5%로 10개월 만에 원자력 반대 의견이 16.4% 포인트 증가하여 과반수를 차지했다.⁵⁰

대진재 1년만인 2012년 3월에 실시된 NHK 여론조사에 따르면, 원전 증설에 찬성하는 사람은 1.7%, 현상유지를 지지하는 사람이 21.3%, 단계적 삭감에 대한 지지가 42.8%, 전면 폐쇄에 대한 지지가 28.4%로, 삭감과 전폐를 합치면 71.2%의 일본 국민이 원자력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조사가 있기 바로 직전인 2011년 12월의 조사에서는 각각 1.9%, 26.5%, 50.7%, 20.3%였다. 이에 비하면 2012년 3월의 수치는 현상유지 지지와 단계적 삭감에 찬성하는 사람이 줄고, 전면 폐쇄에 대한 지지가 늘었다. 삭감과 전폐를 지지하는 사람은 71%로 거의 비슷한 숫자를 유지하고 있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5년이 흐른 2016년 3월에도 확인된다.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이 지난 3월 5일과 6일에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원전의 ‘단계적 삭감’에 찬성하는 사람이 62%로 가장 많았고, 지금 즉시 전폐해

49 역시 보수적인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의 2012년 2월, 2012년 5월, 2012년 7월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여론 동향과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지지통신사와 중앙조사사가 공동으로 2011년 5월 이후 실시하고 있는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50 「『東日本大震災』後の原発への賛否についての時系列変化及び節電・生活に関する意識についての全国世論調査<2012年3月調査結果, 2012年3月30日発表>」, http://www.nrc.co.jp/report/pdf/120330_1.pdf (최종 검색일, 2016.6.6.)

야 한다는 의견도 19%나 되었다.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9%였으며, 이는 ‘단계적 감축’에 대해 74%의 지지를 보여 주었던 2011년 8월의 조사에 비해 원전 반대에 대한 의견의 총 비율에서는 줄어들은 수치였지만, 즉시 전면 폐쇄에 대한 찬성은 8% 포인트 늘어난 것이었다. ‘중설’지지 여부를 묻는 설문은 아예 들어있지도 않았다. 원전에 대한 국민의 입장이 ‘풍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원전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며 지속되고 있고, 즉시 폐쇄 여론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⁵¹

(3) 일어서는 시민: 경건하고 경쾌하게

이렇게 원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고양되는 가운데 2012년 여름 오이(大飯) 원전 재가동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들이 일어서기 시작했다. 2012년 6월 29일, 오이 원전 재가동에 대한 항의 데모에는 20만 명이 운집했다고 추산되고 있으며, 이어서 7월 16일에 요요기공원(代々木公園)에서 개최된 ‘사요나라 원전 10만 명 집회’에는 17만 명이 모여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 시점에서 780만 명의 시민이 반원전 서명에 이름을 올렸다.⁵²

이러한 상황을 보수 우익에서 좌파로 역전향한 활동가이자 문필가인 아마미야 가린(雨宮処凛)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3.11 후의 일본에서 뒷사람에게 순종하여, 행동하지 않는다고 말해지던 이 나라의 국민들이 속속 거리로 나오고 있다. (중략) 사람이 일어서고 있는 사회란 얼마나 가슴이 트이는 시원한 사회인가”⁵³ 3.11 이후 가투 연설에 단골로 출연하는 사회학자 오구마 에이치(小熊英二) 게이오대학 교수도 2012년 7월 19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피력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불만과 정치 불신이 꿈틀거리고 있던 차에 원전 사고와 재가동이라는 사태가 전개되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임계점에 달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 일이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재가동 반대’라는 목소리에는 ‘일본의 존재방식’ 전반에 대한 항의가 담겨 있는 것이다.”⁵⁴

그럼에도 이러한 대규모의 항의 집회는 3.11로부터 1년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일어난 것으로, 돌연 출현한 것처럼 보였다. 그것이 매스컴의 주목을 받은

51 <http://mainichi.jp/articles/20160308/ddm/002/010/039000c> (최종 검색일, 2016.6.5.)

52 鎌田慧, 『世界』, 2012년9月号, 154.

53 雨宮処凛, 「デモのある生きづらくない街」, 『世界』, 2012년9月号, 147.

54 『世界』, 2012년9月号, 147.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새로운 형태의 데모가 출현하고 있던 현실이 있었다.⁵⁵ 아마미야 자신이 관여하고 있던 ‘프레카리아트 운동’⁵⁶이 있었고, ‘자유와 생존의 메이데이’ 데모, ‘사운드 데모’의 수법, ‘노상 파티’ 형식의 데모 등이 2008년 즈음부터 일본 전국에서 시도되고 있었다. ‘인디즈 메이데이’는 대표적인 이벤트였다. 또한 고엔지(高円寺)를 중심으로 ‘가난하고 한가한’ 사람들의 집단에 의한 ‘일반인의 반란(素人の乱)’도 사운드데모를 전개하고 있었다. 이들은 ‘내 자전거를 돌려줘 데모’, ‘집세를 공짜로 해라 데모’ 등 ‘하찮은’ 데모를 진지하게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이다. 3.11 이후의 데모에서 밑불이 되었던 것은 이들 ‘일반인의 반란’ 그룹이었다. 3.11로부터 1달 정도 지난 시기, ‘원전 그만둬 데모(原発やめろデモ)’를 기획하여, 4월 10일에 ‘일반인의 반란’이 주최하는 고엔지 데모에 1만 5천명이 모였다. 그때까지 ‘반원전’은 ‘일부 극렬 좌익의 전매특허’였지만, 이후 일반인=보통 사람들의 데모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데모 참가자가 주최자가 되어 각 지역에서 데모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이들 운동체는 ‘탈원전 스기나미(杉並)’, ‘탈원전 나카노(中野)도’, ‘탈원전 후나바시(船橋)’처럼, 지역의 이름에 ‘탈원전’만 붙여 만든 네트워크형 조직체가 되어 각 지역에서 소규모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⁵⁷

또한 6월 29일 항의 데모의 직접적인 모체가 된 수도권반원전연합(首都圏反原発連合)이라는 이름의 조직 또한 네트워크형 조직으로서, 이미 3월 말부터 총리관저 앞 언덕길인 구미자카(茱萸坂)에서 데모에는 완전 초짜인 ‘순수한 일반 시민들(生粋の市民たち)’이 모여, 일대를 해방구(TAZ, Temporary Autonomous Zone)로 만들어 ‘금요 관저 앞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이 모임이 점차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는 가운데, 6월 29일의 집회가 준비되었던 것이다.⁵⁸

이와 같은 형태의 데모는 기시감이 있다. 1965년부터 1975년까지 10년 동안 ‘베헤렌(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합)’이라는 운동체가 전개했던 베트남전쟁 반대 운동이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전개된 적이 있다. 스스로 조직이 아니라 운동체라고 부르고 있는 점, 주의 주장을 ‘탈원전’ 단 한 가지에 집중하여, 다양한 사상적 입지를 가진 사람들을 조직이 아닌 개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점, 좌우 불문하고 현실정치와의 거리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는 점, 그리고 스스로 정치세력화하기를 의식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이 베헤렌과 겹쳐보이고 있는 점 들이다.

55 雨宮処凛, 앞의 논문.

56 프레카리아트(precariat)는 ‘불안정한(precarious)’과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의 합성어.

57 雨宮処凛, 앞의 논문, 150.

58 野間易道, 『金曜官邸前抗議』,河出書房新社, 2012年, 14-18.

이러한 운동의 주체와 형태를 보면, 일본의 반원전 시위에 모인 사람들이야말로 네그리가 정식화한 ‘다중(multitude)’이 아닐까 생각된다.⁵⁹ ‘수국 혁명(紫陽花革命)’이라고 명명된 이 집회와 시위는 적어도 주최측의 의도에서 보면, ‘전위와 대중’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고 운동의 주체를 설정했으며, ‘활동가’조차도 한 개인으로 받아들여 ‘일반시민’으로서 시위행렬에 서게 했던 것이다.⁶⁰ 이러한 운동의 전개와 확산의 형태는 ‘아랍의 봄’이나 뉴욕에서의 ‘점거 운동(Occupy)’과도 비슷한 것이어서, 글로벌한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활용되고, 중심적 지도자가 없으며, 참가자 내부에서 벌어지는 민주적인 대화를 존중하는 태도 등도 ‘베헤렌’과 ‘점거’에 동시에 닿아 있어서, 시공을 초월한 접점을 갖고 있었다. 오래되었지만 새롭고, 지구적 표준이지만 참신한 운동이 3.11 이후 일본에서 전개된 반원전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시민들은 ‘인류가 아직 경험한 적이 없는 규모의 원전사고의 와중에서 장대한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다’는 인식을 획득해 나가고 있었다.⁶¹

5. 원전국가의 깊이와 넓이

이와 같이 융기하는 ‘시민사회’ 앞에서 ‘원전국가’는 용융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2년 12월에 실시된 총선거는 아베 부활내각을 탄생시켜, ‘탈원전’을 목표로 융기하고 있던 일본이 시민사회에 ‘불변의 핵’이라는 존재를 확인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민주당 정부의 혼돈스러운 국정운영의 반동으로 애초부터 자민당의 승리가 예견된 선거이기는 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최대의 쟁점이 되어 마땅한 탈원전 논의는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선거 결과, ‘탈원전’에 대해서는 ‘거의 함구하고 있던’ 자민당이 압승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던’ 일본 유신의 회는 대승했으며, ‘분명히 탈원전을 주장했던’ 정당들은 모두 참패했다.⁶²

이러한 결과에 대해 당초부터 유리하게 선거 정국을 이끌던 자민당이 원전

59 남기정, 「베트남 반전탈주 미군병사와 일본의 시민운동: 생활세계의 전쟁과 평화」, 『일본학연구』, 2012.5.

60 野間易道, 249.

61 雨宮処凛, 앞의 논문, 153.

62 柴田鉄治, 「原発と選挙—最大の争点だったはずが、どこかへ吹っ飛ぶ」, 『マスコミ市民』, 2013년 1월, 24.

정책을 애매하게 둘러대며, 의도적으로 ‘쟁점화 하지 않기’를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55년 체제하의 개헌 문제와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⁶³ 그러나 자민당의 이러한 전략은 당초부터 예견된 것이었으며, 이러한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탈원전’ 측은 현상인식과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는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를 보다 근원에서부터 재인식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다. ‘원전국가’의 ‘용융’은 멈추었는가, ‘반동’이 개시되었는가, ‘시민사회’의 직접민주주의 시도는 실패했는가. 문제가 만일 풀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2012년 6월의 고양과 2012년 12월의 실패를 딛고, ‘변하지 않는’ 일본의 근원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해답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즉 원전문제는 멀리는 일본의 근대화, 가깝게 잡아도 패전 후 일본 사회의 성립과정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다시 미일동맹이라는 국제적 계기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이러한 역사적 깊이와 지리적 넓이를 고려하면 일과성의 일국적 운동으로는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분석이다.⁶⁴ 이러한 주장에 공통되는 것은, 류큐와 도호쿠, 또는 오키나와와 후쿠시마의 문제, 그리고 기지와 원전의 문제가 하나로 연결된 것이라는 언급이며, 근대국가에서 전후국가로 이어지는 일본의 발전이 끊임없이 내부 식민지화를 시도한 가운데 가능했다는 사실에 대한 지적이다. 나아가 여기에는 일본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근대국가가 갖게 되는 일반적인 문제로서 평등과 차별의 동시진행이라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즉 근대국가 단위의 국민 형성과정에서 평등에 대한 지향이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표면에서는 사라지지만 사회 내부에 더욱 위험한 형태로 차별이 잠복되어 진행되는 문제이다. 즉 ‘기지문제와 원전문제는 닮은 꼴’이며, ‘일본의 변경과 지방에 위협하기 짝이 없는 시설들이 놓여 있다’는 것, ‘보통의 감각으로는 기피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일본인의 총의로서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근원으로 지적되었다.⁶⁵

이러한 지적은 일견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보다 근원적인 쟁점들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에 수궁할 만한 대답을 제시

63 柴田鉄治, 앞의 논문, 25.

64 開沼博, 『「フクシマ」論—原子カムラはなぜ生まれたのか』, 青土社, 2011年; その他, 武藤一羊(2011), 吉岡斉(2012), 石田雄(2012), 大澤真幸(他), 『3.11以後, 何が変わらないのか』(岩波ブックレット863, 2013) 등의 주장도 그 연장에 서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65 大澤真幸(他), 위의 책, 15, 21-23.

하지는 못하고 있는 듯하다. 즉 ‘시민사회’의 용기를 통해 ‘원전국가’의 변화를 초래하는 전략론의 수립에 그들의 지적이 어느 정도 공헌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른바 ‘근대주의 비판론자’들은 이에 대한 고뇌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특히 지적되어야 할 문제는 ‘내부 식민지화’ 담론이다. 그 자체는 ‘가해자 의식의 재각성’을 의도한 것이라 생각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피해자 의식을 오히려 자극하여 근대화의 희생자로서의 일본인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내셔널리즘을 자극하여 실패한 근대국가 재구축의 움직임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⁶⁶ 다른 한편으로는 반원전 운동의 고양과 동시에 진행된 센카쿠/독도 사태를 매개로 피해망상으로 발전하여, 공격적 배외주의를 용인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재후’ 사회로의 전환을 전망하는 미쿠리야 다카시(御厨貴)의 다음과 같은 전망은 섬뜩하다. 즉 ‘재후’의 일본은 “전후”에 의해 ‘지난 전쟁’이 절대화되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일본의 근린 국가들이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일본을 끌어와서, 전쟁책임 등을 들어 일본을 비판함으로써 자국의 정치와 국제관계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며, 3.11 이후에는 “일본을 적대시하여, 문제가 생길 때 마다 이런저런 주문을 들이대는 외교정책은 취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다. 즉 ‘재후’의 시대에는 ‘전후’의 시대가 상대화되고, 따라서 ‘전전’의 시대가 상대화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일본이 일으켰던 제2차 세계대전마저 재해석됨으로써 일본의 전쟁책임 문제도 새롭게 해석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6. 결론

이상, 3.11 이후 일본에서 일어난 사회변동을 추적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다른 많은 일들이 그러하듯, 이 사태 전개는 일본 안에서 일국적으로 생기고 매듭지어지는 일이 아니다. 포스트 후쿠시마의 일본 사회를 살펴본 그 눈으로 시선을 돌려 한국을 바라보자. 이명박 대통령은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 사고를 일으키고 이틀 후인 3월 14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수주에 성공했다며

66 ‘금요 관저앞 향의 시위’에 일장기가 날리는 모습은 이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野間易道, 앞의 논문, 171-176.

기공식에 참가했다. 이를 10면 기사로 전한 같은 날 『한겨레신문』에는 후쿠시마 제1원전 1, 2, 3호기의 노심 용융 가능성을 전하면서 원자력 확대정책은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고 하여, 한국에서도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한겨레신문』에는 서울에서 열린 한국 시민단체 주최 반원전 시위에 관한 기사도 게재했다.⁶⁷ 그런데 같은 날 다른 신문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외교의 성과로서 원전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하필이면 때마침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퇴색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싣고 있었다.⁶⁸

일본에서 반원전 운동이 한참 고양되던 2012년 여름에는 한국에서는 완전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기억도 사라지고 말았는지, 한국정부가 터키와 FTA에 서명함으로써 터키에서 건설 예정인 원전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⁶⁹ 한국의 보도는 대체로 아부다비에 이은 원전 수출의 쾌거를 기대하는 논조였다. 후쿠시마에서의 사고 이후 터키 정부가 교섭 상대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꾸었다는 사실, 그리고 만일 터키의 원전 건설을 수주하면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여 원전의 선진국 입성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장밋빛’으로 그려져 있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이러한 방향에서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부에서도 언론에서도 변화하지 않았다. 2014년 5월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서 한국형 원자로인 바라카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행사에 참석하고 ‘원포인트 원전외교’를 했다고 선전했다.⁷⁰ 2015년 3월에는 사우디아와의 SMART(일체형 원자로) 협력 관계를 공식화했다고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성과를 강조했고, 언론은 이를 받아적었다.⁷¹

마지막으로 ‘미일동맹’으로 지탱되고 있는 ‘원전국가’의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하여, 이로부터 동아시아의 이웃국가로서 한국의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문에서 다루었듯이 3.11을 계기로 ‘원전국가’ 일본의 용융이 시작되었고, 이로부터 우리는 일본에 세워졌던 ‘전후국가’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다. 한편 ‘원전국가’ 일본은 ‘기지국가’이기도 했다. ‘기지국가’란 ‘국방군이라는 이름의 병력을 갖지 않고, 동맹국의 요청에서 기지를 제공함으로써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는 국가’를 말한다.⁷² ‘원전’이 미일동맹의 온전한 운용을 위해 시혜처럼 제공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기지’와 ‘원전’은 연동되어 있었다. 또한 이 두 가지는 일

67 『한겨레신문』, 2011.3.14.

68 『한국경제』, 2011.3.15.

69 『파이낸셜뉴스』, 2012.8.1.

70 『한국경제』, 2014.5.21.

71 『서울경제』, 2015.3.5.

72 남기정, 「한국전쟁과 일본: 기지국가의 전쟁과 평화」, 『평화연구』 9호.

본의 핵심적 국익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성역화’ 되어 있고, 그 결과 두 시설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인간의 생명에 관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감시 감독에서 벗어나 있으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들 시설은 일본의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안고 있다.⁷³ 이러한 일본의 현실에서 반 ‘기지’ 운동과 반 ‘원전’ 운동은 서로 친화적이며 두 개의 운동은 필연적으로 전후 미일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점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⁷⁴

‘도모다치 작전’은 이러한 연동의 구조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오히려 ‘도모다치 작전’은 미일동맹이 ‘원전’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영원히 증명하게 될 것 같다. 전체적인 작전 규모에 비해 약소했다고는 하지만, 후쿠시마에서의 진화 작전에서 미군이 입은 피해는 심각했다. ‘도모다치 작전’에 동원되어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피폭당해 도쿄전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일으킨 미 해군병사는 400명에 달했다. 부시와 함께 미일동맹의 밀월시대를 구축했던 고이즈미 전 총리가 이들의 호소에 눈물을 흘리며 귀를 기울였다는 보도는 ‘원전’과 ‘미일동맹’의 아이러니를 보여준다.⁷⁵ ‘반원전주의자’이나 ‘미일동맹주의자’인 고이즈미는 ‘반원전’이 ‘반미일동맹’이 아님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렇듯 ‘원전국가’의 정치적 표현이 ‘기지국가’였으며, ‘기지국가’의 경제적 표현이 ‘원전국가’였다. ‘기지국가’의 현실을 감추는 포장지로서 ‘평화국가’라는 개념이 국시처럼 일본 국민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것과 마찬가지로, ‘통상국가’라는 표현은 ‘원전국가’의 현실로부터 일본 국민의 시선을 돌리는 데 유효했다. 그러나 ‘원전’에 반대를 외치며 일어섰던 일본의 시민들은 ‘기지화’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종래 다른 갈래로 진행되던 이 두 가지 운동은 2015년 여름 ‘안보법제’ 반대 투쟁을 통해 하나로 중첩되기 시작했다.⁷⁶

‘기지국가’는 전후 수차례 일어났던 좌우 양 진영으로부터의 ‘기지국가’ 해체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 속성은 유지되고 있다. 그 이유는 ‘기지국가’를 탄생시킨 한국전쟁 ‘휴전체제’가 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은 한반도에 두 개의 ‘전장국가’가 ‘휴전체제’ 하에서 존속하는 한 ‘기지국가’로부터 탈피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이야기를 ‘원전국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원전국가’는

73 石田雄, 『安保と原発 一命を脅かす二つの聖域を問う』, 唯学書房, 2012. 3-4.

74 矢部宏治, 『日本はなぜ, 「基地」と「原発」を止められないのか』, 集英社インターナショナル, 2014.

75 『朝日新聞』, 2016.5.19.

76 奥田愛基, 小熊英二, ミサオ・レッドウルフ, 「〈官邸前〉から〈国会前〉へ」, 『現代思想』, 2016년 3月号, 30-55.

용융하기 시작했으나, 이웃 국가인 한국(과 중국)이 ‘원전국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홀로 용해되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탈원전국가’는 동아시아 수준에서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동아시아 재생에너지 공동체’의 창설이 ‘원전국가’를 대체할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다.⁷⁷ ‘탈원전’은 동아시아의 과제이다. 

77 高橋洋, 「3.11後の日本のエネルギー選択—ドイツの決断から何を学ぶか」, 『世界』, 2011年9月.

탈원전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은 가능한가?

- 한중일 3국 핵개발 정책을 중심으로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진행중인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방사능 재앙

올해는 체르노빌 원전사고 30주기이자 후쿠시마 원전 재앙 5주기가 되는 해이다. 사고 후 30년이 지났지만 체르노빌 방사능 재앙은 계속되고 있다. 사고 원전 반경 30km 이내는 여전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마을’로 지정되어있다. 2009년 미국뉴욕과학아카데미가 발표한 체르노빌 방사능 피해 사망자만 해도 98만5천여 명에 이르며 지금도 수십만 명이 각종 암과 방사능 질환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체르노빌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공화국 방사능 오염지역에 사는 가난한 주민들은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물로 연명하고 있다. 사고 5년이 지난 후쿠시마 원전도 대기와 바다로 방사능 물질을 내보내며 끓고 있다. 매일 300톤 이상 바다로 흘러 보내는 방사능 오염수 양이 50만 톤을 넘어선 지 오래이다. 방사능 오염 폐기물을 담은 2,500만개가 넘는 대형 비닐포대는 후쿠시마 원전 주변 마을 곳곳에 쌓여있다. 후쿠시마 주변의 아이와 청소년의 폭발적인 갑상선암 발병은 물론 선천성 기형아를 임신한 여성들의 낙태도 늘어나고 있다. 일본정부는 바다로 흘러 보낸 오염수 외에 부지 내 임시저장탱크에 담긴 고농도 오염수 70만 톤을 희석하거나 증발해서 대기와 바다로 배출할 계획이다.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걷어낸 방사능폐기물 중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소각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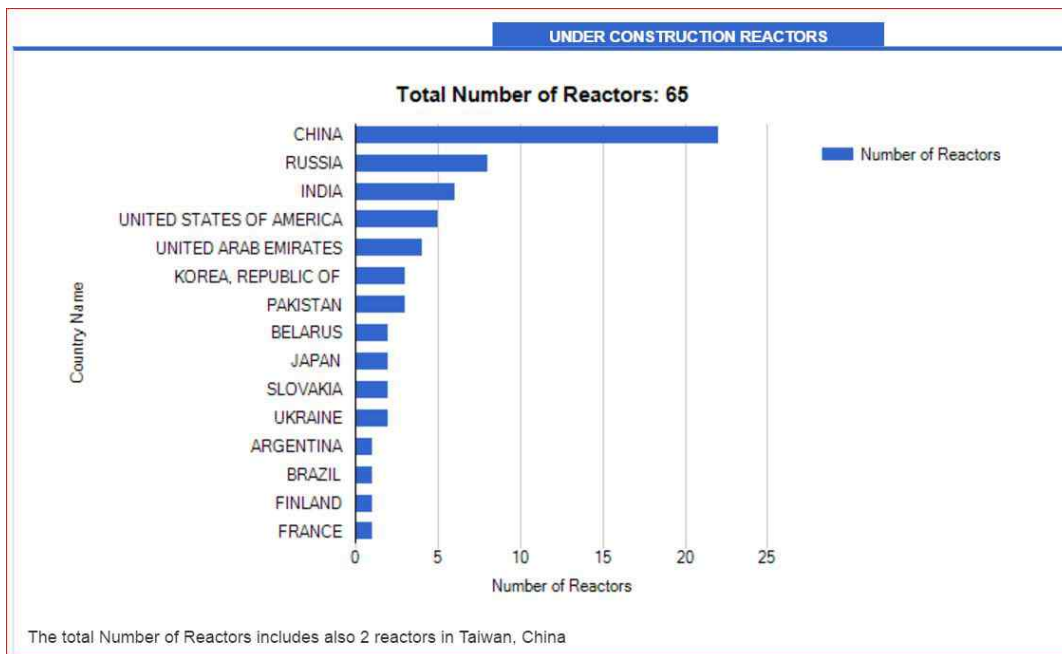
난 다음 남은 기준치 8,000벵크렐/kg, (후쿠시마 이전 100벵크렐/kg에서 대폭완화)이하 방사능폐기물을 도로나 항만 등 공공시설 공사의 재활용 자재로 사용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또한 2020년 도쿄올림픽 성공을 구실로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행정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재앙 때 방사능폐기물 적재와 사고 수습을 위한 임시시설로 사용했던 J빌리지(원전에서 20km떨어진 장소)를 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지정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 연간 피폭량 기준치 1밀리시버트(mSV)를 20밀리시버트(mSv)로 완화해서 방사능오염지역으로의 주민귀환도 진행 중이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진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핵에너지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핵분열반응에서 생기는 막대한 에너지로 물을 끓여 전기를 만드는 것이 핵발전이다. 하지만 핵분열 반응이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원자폭탄 개발에서 시작되었다. 핵분열 반응은 본질상 폭탄용이다. 1953년 12월 8일 유엔총회에서 미국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주창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세운 원자폭탄 제조계획인 ‘맨해튼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다. 전후 마·영 양국은 ‘맨해튼 계획’에서 개발하고 입수한 핵기술을 은닉하고 그것을 통해 핵무기의 독점적 소유를 유지하려고 계획했다. 하지만 소비에트연방이 예상보다 빨리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자 이에 당황한 미국은 미국, 영국, 소련 3개국으로 핵독점을 한정하면서 그 이후 핵개발 경쟁에 대처하려 했다(야마모토 요시타카, 2011).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미국이 동맹국의 핵개발을 통제하고 핵발전 플랜트와 농축 우라늄 핵산업 기술을 팔아 세계 핵산업 시장을 석권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평화로운 핵발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자력의 이용은 군사적 목적의 원자폭탄 개발로 생겨난 것이다. 핵무기 원료를 생산하는 핵발전소가 있으면 핵무기 개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핵무기와 핵발전소 모두 인공적으로 핵물질을 분열시켜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다. 원자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핵발전소도 폭발하면서 대량의 방사능물질이 방출한다. 오히려 원자폭탄에 의한 피해보다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가 더 치명적이다. 원자폭탄의 방사선 피폭은 격렬하게 짧은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만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선 피폭은 내면적이고 작고 지속적 축적을

통해 건강을 해치게 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방출된 방사능물질의 양이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방사능 양의 168배에 이른다. 무엇보다 핵발전소는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방사능물질을 방출한다.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방사능피폭, 주변 생태계의 방사능 피해 없이는 가동할 수 없는 것이 핵발전소의 본질이다. 화력발전과 같이 단순히 물을 끓이는 발전소이지만 핵발전의 연료인 우라늄은 태우고 나면 죽음의 재인 사용후핵연료를 발생한다.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에는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239가 포함되어있다. 원자로에서 막 꺼낸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에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1미터 거리까지 다가가면 단 몇 초 만에 치사량의 방사선에 피폭된다. 플루토늄 239의 방사능 위험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2만4천년이다. 방사능 위험이 1/1000 수준으로 되는 24만년 간 인간 생활권과 생태계로부터 핵폐기물을 격리해야 하지만 인류가 이를 해결할 기술은 없다. 때문에 미국 정부는 사용후핵연료를 지구상에서 가장 유해한 물질로 간주한다.

전 세계 건설 중인 원전



출처: 국제원자력기구 원자로정보시스템(IAEA PRIS), 2016. 6.5

세계의 원전 밀집지역 동북아시아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프리츨프 카프라는 모든 가용한 에너지원 중에서 원자력은 소수 엘리트의 손에 정치권력을 집중시키는 데 가장 적합한 에너지이며 핵경제의 주역인 발전회사, 원자로제작자, 에너지 기업들 모두가 고도의 자본집약적이고 중앙집권적인 핵에너지원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고 설파했다. 현재 핵발전 흐름을 살펴보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어 시민사회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선진국가들에서는 핵발전이 쇠퇴하고 있지만 반대로 중앙집권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나라들에서는 원전산업이 활발하다. 2016년 6월 현재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444기이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폐쇄된 원전은 8기이고, 새롭게 가동된 원전은 10기이다.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나라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폐쇄결정을 내린 일본(5기)을 제외하고 독일(1기), 영국(1기), 스웨덴(1기) 등 유럽 국가들이다. 2015년 신규로 운전을 시작한 나라는 중국(8기), 러시아(1기), 한국(1기)이다. 세계원자력협회는 또한 2030년까지 원전건설 및 투자의 절반이 아시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전망했는데, 2016년 6월 현재 건설 중인 65기 원전 중 52기가 아시아와 동유럽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가운데 20기는 중국에서 건설되고 있다. 핵에너지의 상업적 이용을 먼저 시작한 선진 국가들은 원전산업을 퇴출시키고 있는 데 반해 한중일 3국이 있는 동북아시아는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중일 3개국은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플루토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고속중수로 개발도 진행하고 있어 동북아 지역의 핵위협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한중일 3개국의 핵개발 현황



출처: 동아일보, 2011.4.5

(1) 중국

중국은 세계 1위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국으로 세계 에너지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은 연평균 9% 수준의 지속적인 고속성장으로 전력소비가 급증하면서 11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발전설비용량 및 전력생산량을 기록했다. 2016년 6월 현재 중국은 33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남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20기가 건설 중에 있다(IAEA PRIS). 앞으로 40여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170여기의 원전 건설이 논의되고 있어 세계 최대의 원전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원전 기수와 시설용량 면에서 모두 한국을 넘어서서 원전 5위 국가에 들어섰다. 중국의 원자력

발전은 1970년대 이전 주은래 총리가 원자력 개발을 촉구하면서 시작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 3월 이후 일시적으로 안전계획 수립과 기존원전의 적절한 설계, 부지선정, 보호 및 관리가 보장될 때까지 신규 원전의 승인 중단을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2년 10월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원전중장기발전계획(2011~2020)을 수정 의결하고, 원전 설비용량을 2020년까지 현재의 3배에 달하는 58GW(1GW는 1000MW급 원전 1기 용량)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2030년에는 150GW 용량까지 늘릴 계획이다(한국원자력문화재단). 중국의 원전기술은 Daya Bay 원전 건설 당시 1퍼센트 수준이던 기술 자립도가 2002년 완공된 Lingao 원전에서 64퍼센트로 높아졌고 2014년 완공된 Yangjiang 원전의 경우 기술자립도 85퍼센트로 급격히 상승(한국원자력산업회의, [원자력산업 34권, 3호])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모든 형태의 원자로 기술을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자체적으로 가압경수로 기술 CAP1400을 보유하고 있다(한국에너지공단 글로벌전략실). 앞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원전 설비 국산화를 추진하여 지적재산권이 있는 원전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원자력 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루마니아, 아르헨티나, 터키, 남아프리카 등과 원자력 기술 수출, 원전 건설 등에 대한 협력을 체결했다. 중국은 세계 14위의 우라늄 생산국이면서 소비량의 절반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체적으로 핵연료를 제작하거나 공급할 계획이다. 2011년 7월 중국은 고속중수로 실험로 20MW도 전력망에 연결했다(원병출, 한국원자력연구원, 2013). 세계원자력협회는 중국이 2017년까지 중국내 핵연료 재처리 시설 개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실제 중국은 고온 고속로, 상업용고속로, 소형로 개발 등 다각적인 핵산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원자력 발전현황



(2) 일본

일본은 세계 3위의 원전 국가로 후쿠시마 사고 이전 54기의 원전 보유국에서 2016년 6월 현재 43기 원전을 가동 중이다. 1955년 ‘원자력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핵개발에 나선 일본은 처음부터 군사적 사용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과 고속로 건설에 주력해왔다. 후쿠시마 이후인 2015년 3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1~6호기를 포함하여 도카이 1호기, 하마오카 1,2호기, 미하마 1,2호기, 시네마 1호기, 겐카이 1호기, 쓰루가 1호기 등 총 14기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집권당이었던 민주당 간 나오토 총리는 ‘2030년까지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발표했다. 하지만 2012년 12월 총선에서 승리한 자민당 아베 정권은 원전재가동 정책을 표방하고 2015년 6월과 7월 가고시마현 센다이 원전 1호기와 2호기를 재가동 승인하면서 2년여 가까이 유지되었던 원전 제로 사회가 깨졌다. 2014년 12월 경제산업성은 노후원전을 폐쇄하는 동시에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는 ‘재건축’ 방안 허용을 검토 중이다(양맹호, 2015). 지난 4월 가고시마현 구마모토 지진으로 센다이 원전 가동 중단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일본 정부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원전 중지를 하지 않았다. 한중일 3개국 중에서 재처리와 고속로 사업을 가장 먼저 추진한 나라는 일본이다. 핵발전을 시작할 때부터 군사적 목적을 염두에 두었던 일본은 50여년간 2조 엔을 투자하여 로카쇼무라에 재처리 시설을 건설했지만 아직도 가동에 들어가지 못했다. 올해 3월 가동이 이뤄지면서 무려 22번째 가동이 연기되었다. 이번엔 다시 2018년 상반기에 가동하겠다고 하지만 일본에서 재처리공장은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재처리공장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몬주 고속로는 1994년 가동을 목표로 한 이후 이 역시 지키지 못하고 1995년 40% 출력에서 발전을 포함한 종합적 시험을 실시했다. 하지만 시험을 시작한 찰나에 2차 냉각재가 파손되고 냉각재로 쓰인 나트륨이 분출되어 화재가 발생했다. 14년 5개월이나 다시 정지되어 있다가 2010년 5월 8일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제 1단계 시험운전 과정에서 936회의 경보음이 울리고 32군데의 잘못된 곳이 발견되었다. 2011년에는 출력시험 중 연료교환 중계기가 원자로 속에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난 다음 아직까지 재가동에 들어가지 못했다. 몬주 고속증식로 역시 파탄난 사업으로 드러났다.

(3) 한국

현재 우리나라에는 부산 고리, 경주 월성, 울진, 영광에서 25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으며, 고리와 울진에서 3기의 원전이 건설 중에 있다. 2015년 7월 정부는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60조원을 투자하여 원전 13기, 석탄화력 20기, 가스복합화력 14기 등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15년간 연간 2.2% 안팎의 전기수요 증가를 전제로 원전과 화력발전 중심의 정책을 계속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97%를 수입하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산업 수출액보다 더 많은 돈을 에너지 수입에 사용하면서도 전력산업의 약 92%를 원자력, 석탄, 복합화력 등 3대 전원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원전 건설이 추진되면 우리나라 고리원전은 전 세계 444기 원전이 가동되는 188개 원전부지 중 원전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된다. 이미 우리나라의 고리, 월성, 울진, 영광 등 4개 지역은 모두 전 세계 원전 밀집도 10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고리원전사이트에 들어서는 9번째 10번째 원전으로 반경 30km 이내 인구 340만이 거주하는 지역에 10기의 원전이 가동되는 세계 유일한 지역이 된다. 7,8번째 원전이 건설 중인 울진원전 부지도 계획대로 10기의 원전이 들어서면 고리와 울진은 전 세계 원전 밀집도 1,2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정부는 고리와 울진 부지에 추가로 건설 중인 원전 외에도 삼척과 영덕을 새로운 원전 후보지로 정하고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세계 원전 3대 국가를 목표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인 2012년 11월 신규 부지로 지정한 곳이다. 한국은 핵발전 확대와 더불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고속로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12월 이명박 정부의 원자력위원회에서 2028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과 나트륨냉각고속로 실증시설을 건설하기로 의결한 다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열린 2011년 11월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원자력진흥종합개발계획’에 포함하여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1955년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 때문에 미국 동의없이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할 수 없다. 재처리는 핵무기 재료인 플루토늄 추출을 목적으로 개발된 핵군사 기술의 중심이다. 미국은 핵개발 통제와 원자력산업을 석권하기 위해 일본 등 우리나라와 한미원자력협정을 체결했지만 당시 이승만 정부는 군사적 목적이 있었다. 실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핵무기 개발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1991년 11월 노태우대통령이 한반도비핵화선언을 하고 뒤이어 12월 한반도비핵화남북공동선언을 하면서 핵무기 개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노무현 정부 때 원자력연구원이 몰래 우라늄 농축을 시도하다가 국제원자력기구의 제재를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국내 원자력계는 핵개발에 대한 야심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원자력대국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재처리와 고속로 건설계획을 확정했다. 국내 원자력계가 추진하는 재처리는 기존 재처리 국가들이 사용해온 사용후핵연료를 질산에 녹여서 플루토늄을 추출해내는 습식방식이 아니라 전기분해를 통해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분리하는 건식방식(파이로프로세싱)이다. 국내 원자력계는 파이로프로세싱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에는 우라늄 불순물이 섞여있어서 핵무기 원료로 전용할 수 없다며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4월 미국 국무부는 공식문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파이로프로세싱이 재처리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는 미국정부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하며 한편으로는 재처리 연구 사업을 계속 진행해왔다. 박근혜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미국 대표부를 방문하여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재처리 사업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 결과 2015년 11월 미

국으로부터 미국산 우라늄 20% 농축과 파이프 프로세싱 3단계 재처리 단계 중 1 단계에 해당하는 전해환원(사용후 핵연료를 전기로 분해하여 산소를 없애고 금속으로 만드는 기술)연구를 허용 받았다. 한국 정부와 원자력계가 세계적으로 실패한 재처리와 고속로에 매달리는 이유는 핵개발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세계 6개 이상 원전 부지 규모 순위

<표 1-1> 세계 TOP 10 대형 다수호기 원전

순위	국가	원자력발전소	원자로 개수	설치용량(MW)	반경 30km 인구 (만)
1	한국	고리	8	8260	341
2	캐나다	브루스	8	6700	3
3	한국	한울	6	6216	8
4	한국	한빛	6	6193	17
5	우크라이나	지포로지에	6	6000	32
6	프랑스	그라블린	6	5706	46
7	한국	월성	6	4809	130
8	중국	진산	7	4386	130
9	캐나다	피커링	6	3244	220
10	인도	라자스탄	6	1180	46

출처: IAEA PRIS 자료와 Nature 지 자료를 바탕으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작성

(4) 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나라가 대만이다. 2016년 5월26일 대만 경제부장관은 원전제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되어 있다며, 2025년까지 원전을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전을 폐기하는 9년 동안 전력의 20%를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것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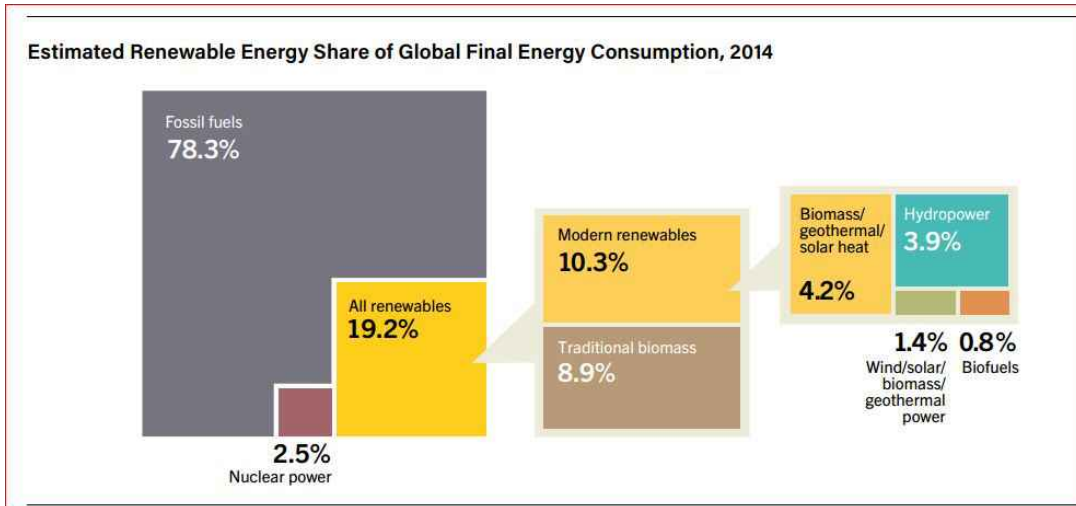
재생에너지가 핵에너지를 대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만은 3개 사이트에 각 2기씩 6기 원전이 가동 중에 있는데 전체 발전량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이른다. 이번 원전제로 결정에 앞서 대만정부는 2014년 4월 공정을 98% 완공된 제 4원전의 건설 중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제 4원전은 1980년대 기획하여 2000년에 착공한 것으로 일본 히타치와 도시바가 원자로 제조와 수출을 담당하고 미국 GE사가 원자로와 원전지구 설계를 했다. 애초 제4원전은 2006년에 완공계획이었으나 제조사와 설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밀집지역에 지반구조의 문제 등으로 공사 15년이 지나도록 미완공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공사경비가 당초 56억6천달러에서 90억 달러로 증가하고 전 국민적 반대 등 총체적 문제가 발생하자 대만 핵에너지관리기구는 이 계획을 완전히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했다. 후쿠시마 이전 대만정부는 3개 사이트의 기존 원전은 수명을 20년 연장하고, 4발전소는 예정대로 가동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후쿠시마 이후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탈핵운동에 밀려 거의 완공된 제4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지난 5월 차이잉원 민진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2025년 원전제로 대만'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원전을 넘어 재생에너지를 선택한 나라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핵발전 확대와 핵개발에 집중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대만 정부의 사례는 숨통을 트이게 한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대만이야말로 세계적인 흐름을 받아들인 유일한 국가라 할 수 있다. 최근 원자력에서 탈피하고 있는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드라마틱한 상황은 대만의 선택이 우연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 7일부터 11일 사이에 포르투갈은 약 4일 107시간 동안 태양광과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전체 전력을 공급했다. 프란시스코 페레리아 포르투갈 지속가능성 엔지오 대표는 “우리의 다음 목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스웨덴 수상은 2025년까지 원자력과 화석연료 프리를 선언하며 “스웨덴은 세계에서 화석연료 제로 첫 번째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계획으로 현재 스웨덴 2/3의 전력을 풍력과 핵에너지로부터 얻고 있지만 앞으로 스웨덴 정부는 여러 개의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더 이상 신규원전 건설을

하지 않는 대신 풍력발전량을 과감하게 증가시키고 2017~2019년 사이 태양광발전 분야에도 지금 예산보다 8배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 통계청 연감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사이, 스웨덴은 에너지 수요의 51.1퍼센트를 재생에너지로 채워서 다른 유럽국가들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5월 8일 독일에서는 낮 시간 독일 전체 전력의 거의 9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2022년 8기 원전을 폐쇄하고 2022년까지 나머지 9기 원전을 폐쇄하여 원전제로 사회를 결정한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2000년 6퍼센트에 비해 27퍼센트로 확대되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독일을 비롯하여 벨기에,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 핵발전 선진국인 유럽 국가들은 원전의 단계적 폐쇄나 신규 원전 건설 유예 정책을 추진해왔다. 최근엔 원전 친화적인 정책을 선택했던 서유럽 몇 나라도 원전 정책을 바꾸고 있다. 세계에서 원전 비중이 가장 높은 프랑스는 2014년 10월 하원에서 통과된 녹색에너지전환법에 따라 2025년까지 24기 원전을 폐쇄하여 원전 비중을 현재의 77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는 40%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올란드 정부는 독일 국경에 위치한 가장 오래된 페센하임 원전의 가동중단과 폐쇄를 선언했고 건설 중인 플라망빌 원전 외에는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후쿠시마 이후 원전 정책을 전환했지만 신규원전 계획을 밝혔던 네덜란드(가동중인 원전 1기)도 원전건설을 유예한 상태이다. 서유럽국가에서 유일하게 원전 건설을 하고 있는 나라인 핀란드 올킬로오트 3호기 원전의 경우 10년 이상 원전건설이 연기되고 있다. 같은 모델로 건설되고 있는 프랑스 플라망빌 원전도 건설이 늦어지고 있다. 핀란드 올킬로오트 건설에 투자한 프랑스 원전회사 아레바는 올킬로오트를 통해 원자력르네상스를 견인할 계획이었으나 오히려 이 원전으로 인해 기업 자산이 감소하여 현재는 거의 파산상태에 있다. 아레바 지분을 인수한 프랑스 국영업체 EdF 기업가치도 함께 추락했다. 영국의 경우도 원전 건설업체에 재생에너지에 부과하는 고정가격제도를 보장하여 현재 전력가격의 두 배에 해당하는 가격을 보장해주면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다(김수진, 2016).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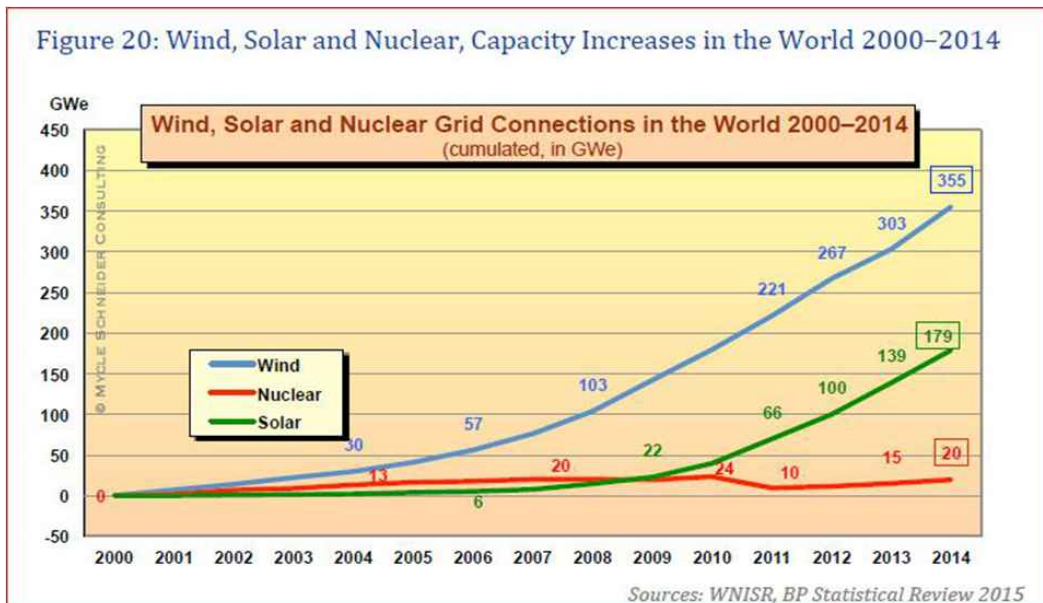
출처: REN21, Renewables 2016 Global Status Report 2016

원자력을 압도한 재생에너지

최근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전력 생산능력 대비 40%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가격의 급격한 하락, 에너지 효율성과 에너지 저장 기술 등으로 재생에너지의 비약적인 성장은 세계 에너지시장 지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인نس에 의하면 2004년에서 2015년 사이 재생에너지 부문 투자는 계속 증가세에 있다. 2001년에서 2013년 사이 에너지원별 신규발전설비에서 비 재생에너지인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분야는 81퍼센트에서 58퍼센트로 축소되었지만, 재생에너지는 19퍼센트에서 42퍼센트로 늘어났다. 2015년도에는 재생에너지에는 3,290억 달러가 투자되었지만 화석기반 에너지에는 2530억 달러가 투입되었을 뿐이다. 태양광 발전 모듈가격은 2008년 이후 80퍼센트 정도나 하락했고 풍력발전 터빈 값은 약 50퍼센트 내려갔다. 세계적으로 2000년에서 2014년에 전력망에 연결된 에너지원 중 풍력발전은 355GW, 태양광발전은 179GW 만큼 늘어나는 동안 원자력은 20GW에 불과했다. 2014년 전 세계 최종 에너지소비에서 핵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5퍼센트에 불과하지만 재생에너지는 19.2퍼센트에 이른다. 2015

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총회에서 전세계 에너지 전문가 600여명이 참가한 재생에너지 포럼에서는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은 이미 시작되었고 문제는 속도”라고 확인했다. 세계적 기업인 애플·구글·월마트·이케아·유니레바·나이키 등이 100퍼센트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충당하겠다고 한다. 핵산업의 퇴출은 세계은행과 유엔의 정책에서도 확인된다. 2013년 11월 세계은행과 유엔은 국제사회로부터 2030년까지 최빈국에 전력망 정비를 위해 사용할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모으면서 어떤 경우에도 원전에는 투자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개발에만 사용하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했으며,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을 통해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10년 18퍼센트에서 2030년 36퍼센트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세계 전력망에 연결된 풍력, 태양광, 원전(2000-2014)



세계 핵개발의 각축장이 된 한중일 3국

유럽을 포함 미국 등 핵발전 선진국들에서 원자력산업이 사양화된 이유는 원자력을 대신할 재생에너지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고속로 역시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실패로 판명났다. 전 세계 원전국가 중에서 재처리사업은 경제성에서 모두 실패로 드러났다. 미국은 1970년대 상업적 목적의 재처리를 폐지했으며 스웨덴도 1980년 이전에 폐기를 결정했다. 재처리에서 얻은 원료는 우라늄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구입할 기업도 이를 사용할 원전도 없는 상태이다. 때문에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재정적 파탄에 직면했다. 영국의 셀라필드 재처리시설은 2018년 이후 핵연료 계약 건이 없어서 폐쇄될 예정이다. 게다가 핵폐기물 오염시설 정화 비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미 재정적 파산 상태나 다름없다. 프랑스도 2012년 이후 재처리한 핵연료의 계약이 없어서 재처리사업을 하고 있는 국영기업 아레바와 EdF의 재정위기에 한몫을 더했다. 나트륨 냉각 고속로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고속로의 냉각재인 나트륨은 공기, 물, 금속과 닿으면 격렬하게 반응하며 폭발한다. 미국의 핵무기 비확산 권위자인 프리스턴대의 프랭크 본 히펠교수는 “고속로는 기본적으로 고비용일뿐만 아니라 지난 50년간 1천억원 달러의 비용을 투자했음에도 설비이용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실례로 1991년 독일은 30년간 건설한 고속로를 가동없이 폐쇄했다. 미국도 페르미 고속로가 나트륨 폭발을 일으켜 가동율 1퍼센트에 그치고 중지했으며, 클린치 리버 고속로는 400퍼센트의 비용을 초과하고도 설비가동율 0퍼센트에서 중지되었다. 프랑스의 슈퍼피닉스 고속로는 잦은 화재와 고장으로 가동율 8퍼센트에서 중지되었다. 재처리와 고속로의 실패는 일본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일본에 이어 한국과 중국마저 핵개발 경쟁에 뛰어들어 동북아 핵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중일 3국의 공통점은 지속적인 핵발전 확대와 핵개발, 그리고 원전수출로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본 히펠 교수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방문학자인 요시다 후미히코 교수와 공동으로 허핑턴포스터에 기고한 글에서 “한중일 3국이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상대방의 의도를 의심하며 무기용 플루토늄 추출에 집착하고 있다”며 이러한 동북아 3국의 플루토늄에 대한 집착이 이 지역을 갈수록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중일 3국이 있는 동북아 지역은 그야말로 세계 핵개발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동북아 핵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한중일 3국의 핵개발 경쟁에 맞서 한국과 일본, 대만의 시민들은 상호연대하며 탈핵운동을 펼쳐왔다. 이 가운데 후쿠시마 사고이후 원전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낸 곳은 대만 시민들이다. 대만의 탈핵운동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어 3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만 시민들은 1985년 제4 핵발전소 문제 공론화를 시작으로 1988년부터 본격적인 반대운동을 지속해왔다. 후쿠시마 사고 2주기 집회에 20여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 활화산처럼 타오른 탈핵운동은 좌우를 망라한 사회적 연대와 다양한 집단의 활동을 통해 제4원전 건설 중단과 원전폐기 선언을 이끌어냈다. 일본 시민사회도 후쿠시마 사고이후 5년 동안 중단 없는 탈핵운동을 해왔다.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탈핵집회와 총리관저 앞 농성과 시위 등이 이어졌다. 사고 원전이 포함되었지만 14기 원전의 폐쇄 결정과 나머지 원전의 재가동 반대운동을 막아내는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2015년 6월 한국 시민사회도 후쿠시마 사고이후 집중적으로 벌여온 노후원전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을 이끌어냈다. 한편 신규원전 후보지인 삼척에서는 2014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핵발전소 건설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건 김양호시장이 당선되었다. 김시장은 당선이후 선관위에 삼척원전찬반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구했지만 선관위가 거부하자 같은 해 10월 민간차원에서 삼척원전유치찬반주민투표를 실시하여 85.6퍼센트 주민의 원전반대 입장이 확인되었다. 또 다른 후보지인 영덕에서도 2015년 11월 주민대책위 주관의 주민투표를 실시했는데 91.7퍼센트 주민이 원전유치 반대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의 핵발전 중심 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이 없다. 일본 시민사회도 원전제로 정책을 거꾸로 돌리는 아베 정책을 뒤집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원전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패한 일본의 핵개발 사업이 한국과 중국에서도 재연되지 않도록 한중일 정보교류와 시민사회의 연대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지역에는 탈핵운동의 정보교류와 연대활동을 중심으로 반핵아시아포럼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핵개발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시민사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대만 탈핵운동의 결실은 지난 5월 탈핵입장을 견지한 민진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루어졌다.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얻은 탈핵운동의 힘이 정치권을 변화시킨 것이다. 한국에서 고리 원전 1호기가 폐쇄되는 과정도 부산 경남지역에서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시민사회가 고리 1호기 폐쇄운동에 나서자 지역 정치권이 당정협의를 통해 폐쇄 결

정을 이끌어낸 것이다. 삼척의 경우도 탈핵을 공약으로 내건 시장의 당선으로 주민투표가 시행되었고, 삼척 사례와 고리 원전 1호기 폐쇄 결정에 힘입어 영덕도 주민투표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일본의 경우 거대한 탈핵운동의 흐름에도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원전 정책의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 한국, 일본, 대만에서의 탈핵운동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 핵의 고리에 균열을 내고 지속가능한 탈핵 사회를 만들어가려면 무엇보다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에 이어 신규원전 건설을 막아내는 일에서 성과를 내고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한국 시민사회가 정치적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일본 시민사회와 함께 중국의 벽에 균열을 내는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 국가들에서 밀려난 핵산업의 동북아 집중을 막고 중동과 인도네시아 등으로 진출하는 원전수출을 견제를 할 힘은 한국과 일본에서 핵산업 의존체계를 허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의 핵개발 경쟁은 시민사회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안으로는 탈핵운동의 확산과 함께 한중일 3개 국가적 차원의 원자력안전협력체계 구축과 핵경쟁 방지대책을 세우는 일에도 역할을 찾아내야 한다. 한중일은 2008년부터 원자력안전 고위급규제자회의를 두고 주요 현안에 대해 실무기관 간의 의견교환을 해오다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중일 고위급 회의로 격상하고 국가 간 정보교환체계구축을 위한 공용 웹서버개발 및 방재 훈련 상호참관 등의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동북아 원자력안전협력 회의를 제안해 놓은 상태이지만 아직 한중일 원자력안전체계는 형식적 수준에 그쳐있다. 1958년 로마협정에 따라 설립한 유럽의 핵관리 회의체인 유럽원자력공동체인 유라톰(EURATOM)에는 프랑스, 독일, 영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아일랜드, 덴마크 등이 9개국 참여하면서 원자력안전과 관련한 공동대응 등을 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이후인 2014년 8월에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는 원자력안전원칙으로 △ 국가규제당국의 권한 및 안전지침 채택 △ 유럽연합 차원의 안전성 목표기준 제고 △ 상호점검 시스템 구축 △ 안정성 평가 정례화 등을 새로운 지침으로 채택했다. 후쿠시마 이후 한중일 3국은 모두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해 5월 일본이 수입규제가 부당하다며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자 대만과 중국은 WTO에 공동대응 할 뜻을 밝혔다. 중국은 최근에도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영향에 대해

서 우리나라와 공동 대응할 의지가 있음을 표명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중국과 대만의 연대 제안에 화답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핵의 고리 속에 둘러싸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방사능 사고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한중일 공동협력체계가 절실하다. 정부는 중국이 제안하는 공동대응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동시에 한중일 원자력안전협력체계를 실질화해야 한다. 동북아의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핵개발 경쟁을 멈추기 위한 정치적 전략도 필요하다. 한중일 3국의 상호 의심에 기초한 핵개발 경쟁을 중지시키기위한 동북아 평화협정 같은 것이 필요하다. 본 히펠교수는 일본과 한국의 핵개발 경쟁을 중단시키려면 양국과 원자력협정 등을 맺고 있는 군사동맹국 미국이 이 협정을 활용하여 한국과 일본을 더욱 압박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본 히펠 교수의 지적처럼 한중일 3국 핵경쟁에서 미국 역할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일 양국의 핵개발 경쟁을 중단하고 중국도 협력하도록 만드는 길이 동북아 핵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 시민사회는 국내 핵개발 계획부터 중단시키는 길을 만들어가자. 그 길이 동북아 핵위협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말이다. 

□ 참고자료

- 김수진, 2016. 2, “서유럽국가의 원자력 현황 및 정책방향”, 사회공공연구원
- 글로벌전략실, 2015.7, “주간 에너지 이슈 브리핑”, 한국에너지공단
- 야마모토 요시타카, 2011, 후쿠시마 일본 핵발전의 진실, 동아시아
- 양맹호, 2015, “2015 국제 원자력 동향과 시사점 - 원자력정책 Brif Report”, 한국원자력연구원
- 원병출, 2013.1, 후쿠시마 원전사고이후 각국의 원자력정책방향 동향분석, 한국원자력연구원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2015. 9, “중국의 원자력발전 현황”,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토론 3

“포스트 후쿠시마의 일본사회: 용융하는 원전국가, 융기하는 시민사회” 토론문

세션 2 한중일 원전과 탈원전 발전모델 토론문

이 문 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1. 재난과 사회의 상호구성성

먼저 이 논문이 3.11과 후쿠시마 참사에 대한 단순한 재난 분석을 넘어, 이를 전후 일본의 국가 정체성이나 체제와의 연관 속에 밀도 있게 조명하고 있다는 점이 신선하고 통찰력 있게 다가왔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필자에 따르면, 미일동맹과 한국전쟁을 근간(base)으로 한 ‘기지국가’, 그 경제적 표현으로서 ‘원전국가’, 이 연동하는 두 정체성을 평화라는 ‘외피’로 수렴해내는 ‘평화국가’(평화헌법)의 원리가 3.11과 후쿠시마 대참사 속에 동요, 충돌한다. 이렇게 ‘용융하는 원전국가’ 속에 전후 일본의 국가 컨셉이 흔들리고, ‘재후(災後) 일본’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각인되고, 전후 일본을 구성해온 세 정체성들 간의 불안한 동거가 종말을 향해 치달으며 새로이 재편, 또는 형질전환 되어가는 과정이 논문 속에 역동적으로 펼쳐진다. ‘재후 새로운 재편’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원전에 대한 극적으로 달라진 여론, ‘융기하는 시민사회’를 통해 보다 민주적인 발전가능성

을 보여주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히 정반대로, 원전국가/기지국가의 용융 속에 보다 강고한 국가주의, 일본중심주의를 버려내려는 보수적 움직임(평화헌법 수정, 보통국가화 등)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 끝이 어디로 향할지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지만, 이 논문은 3.11이 초래한 이 역동적 변화를 “우발적 필연”이라 지칭함으로써, 재난과 사회의 상호구성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이 상호구성성은 지구화 시대 재난의 일반적인 패턴이 된 ‘복합재난’의 특성이기도 하다.

2. 지구화 시대의 복합재난

재난을 의미하는 영어 ‘disaster’는 그리스 어원상 ‘나쁜, 잘못된’이라는 의미의 접두사 ‘δυσ-(dis-)’와 ‘별’을 뜻하는 단어 ‘ἄστρο (astro-, star)’가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별자리가 일으키는 재앙’이라는 전통적 의미는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자연적 또는 초자연적 현상으로, ‘천벌’이나 ‘신의 분노’ 등의 비유가 함축하는 바와 같은 신화적이고 주술적인 맥락을 갖는다. 반면 현대적 의미의 재난은 이미 그러한 자연/인간의 구분을 벗어나는 것으로, 그 속에는 태풍, 홍수, 해일, 지진 등의 ‘자연 재해’뿐 아니라, 대형 화재, 폭발, 붕괴, 침몰, 오염 사고 등의 ‘인적 재난’, 나아가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를 동반하는 테러나 전쟁 등의 ‘사회적 재난’이 포함된다.

지구화 시대의 재난에 전적으로 새로운 특성은 현대적 재난의 외연이 포괄하는 위와 같은 다양성이 복합성으로 중첩, 전화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연 재해, 인적 재난, 사회적 재난 사이의 상호 의존성이 고도로 강화되어, ‘두 가지 이상의 재난이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동반되는’ ‘복합 재난’이 그 상례가 되는 것이다. 이 때 복합 재난을 추동하는 ‘재난의 상호 의존성’이 지구화 시대 극대화된 ‘세계의 상호 연관성’과 긴밀하게 관련될 것임은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올리히 벡의 주장처럼 “글로벌 리스크는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의존성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이는 탈원전이 일본의 경계를 넘어 동아시아 단위에서 사고되어야 하며 “탈원전은 동아시아의 과제”라는 필자의 문제의식과 정확히 조응한다.

또, 지구화 시대의 자연 재해는 많은 경우 과학과 문명의 결핍이 아닌 그 과잉의 결과로, 이런 의미에서 “명칭 말고는 ‘자연적인’ 것이 전혀 없는” 인적 재난의 다른 형태(E. 발리바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자연재해가 인적, 사회적 재난과, 문명의 발전이 재난의 확대로 연동되는 지구화 시대 복합 재난의 양상은 소통/접촉

의 전면화와 단절/대립의 극단화, 수평적 평준화와 수직적 위계화를 공존시키는 지구화의 패러독스를 예민하게 반영한다. 지구화 시대의 재난은 이렇게 지구화의 패러독스 또는 과학기술문명과 밀접히 결합된 글로벌 자본주의의 틈과 균열에 잠복하며 증식하고, 재난과 (구조적/문화적) 폭력이 함께 사고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은 여기에 근거한다. 3.11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전후 일본의 사회 속에 구조화된 폭력, 즉 미국 패권의 원리, 기지국가에 기원한 기만적(불완전한) 평화의 원리, 내부 식민지화를 통한 제국 계승의 원리와 밀접히 연동된 것으로 바라보는 이 논문의 관점은 이러한 복합재난의 본질, 재난과 폭력의 상호의존성을 일본의 사례 속에 통찰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복합재난의 불길한 기원, 체르노빌 1986

이 지점에서 복합재난과 관련하여, 또 여러 가지 의미에서 후쿠시마와 유사한 교훈을 남긴 체르노빌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사실 토론자가 일본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토론을 맡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체르노빌을 ‘후쿠시마의 불길한 기원’으로 그와 함께 논해주기를 주최 측이 요청했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당시에는 소련에 속했으나 현재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이며 벨라루스 국경과 인접한 체르노빌 레닌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로 4호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3~4초 간격으로 잇달아 발생한 두 번의 폭발로 무려 1200톤에 달하는 원자로 덮개가 날아가고, 상공 1km까지 치솟은 불기둥을 시작으로 열흘간 화재가 이어지면서 상상을 뛰어넘는 양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더불어 원자력 사고 등급 최고 수준인 7레벨로 평가된 체르노빌 사고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기술 참사로 기록되었다.

역설적이게도 사고는 비상 사고 대비를 위한 실험을 하던 중 일어났다. 실험은 비상사태가 발생해 전력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원자로 안전에 결정적인 냉각수 공급 펌프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실험 과정에서 다양한 이상 징후가 연달아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험 기사는 원자로 운행을 정지시키지 않고, 오히려 실험 지속을 위해 비상 냉각 시스템을 포함한 자동 안전 보호 시스템을 해제해 버렸다. 결국 원자로 출력이 폭주하고 냉각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 증기 압력이 미친 듯이 상승했고, 현장 감독이 다급하게 원자로 비상 정지 지시를 내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자동 안전 보호 장치를 꺼 버린 지 정확히 44초 후 원자로로는 폭발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했지만, 대체로 1) 사고 발생 가능성을 전혀 예측하지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은 실험 기술자의 부주의와 실수, 2) 체르노빌 원전의 RBMK형 원자로가 가진 구조상의 결함(저출력에서 몹시 불안정하고, 화재 위험이 큰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하며, 비상사태 시 오염 물질의 유출·확산을 막을 격납 용기가 따로 없다는 점 등)이 결합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3) 하지만 이러한 위험 요소를 조장하고 방치하여 참사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사후 대처와 복구, 피해 확산 방지를 결정적으로 지연시킨 소련의 관료주의와 비밀주의, 안전 문화의 결여 등이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함께 지적되었다. 한편 근원적인 차원에서 언제나,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실수나 결함이 그토록 치명적이고 광범위하며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핵 기술 자체의 ‘존재 합리성’에 대한 의문이 어느 때보다 설득력 있게 제기되었다.

체르노빌 사고가 핵의 군사적 사용뿐만 아니라 그 ‘평화적 이용’도 거부하는, 다시 말해 반핵을 넘어 탈핵의 필연성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가 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규모 때문이다. ‘반감기 2만 4000년(플루토늄239)’ 같은 표현이 환기하듯이 인류는 이 새로운 유형의 재난 앞에서 도대체 그 끝이 언제일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아득한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체르노빌 폭발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양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 폭탄 투하 시에 방출된 것을 합친 양의 200배에 달한다. 방사능 오염의 최대 피해국은 사고 원전과 가까운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세 나라였지만, 방사성 낙진은 사고 발생 이틀 만에 1000km나 떨어진 스웨덴에, 닷새 후에는 제트 기류를 타고 8000km나 떨어진 일본에 도달했다. IAEA 보고에 따르면 이 사고로 유럽의 약 20만 km²의 땅이 방사능에 오염되었고 강과 바다, 지하수, 그곳에 서식하는 동식물이 오염되었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세 나라에서만 사고 후 거주 불능의 고(高)오염 구역에서 소개된 사람이 11만 6000명, 집중 통제 구역 거주자가 27만 명, 기타 오염 지역 거주자가 500만 명에 달하고, 사고로 인한 직간접적 방사성 장애로 영구 불구가 된 사람의 수만 14만 8000명이다.

특히 방사능 피폭의 최대 피해자는 세 그룹으로, 1) 사고 수습에 나선 원전 직원과 당시 열흘간 지속된 화재 진압에 동원된 소방관, 2) 덮개가 날아가 버린 원자로에서 무차별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무려 5만 톤에 달

하는 물질을 공중 투하한 헬기 조종사, 3) 방사능으로 오염된 건물이나 집, 도로, 토양 등을 철거하고 닦고 교체하는 작업에 동원된 해체/청소 작업자다. 1)과 2)의 응급 작업자(emergency worker)의 수는 1000명, 3)의 경우 해체, 청소 작업이 일 단락된 1989년까지 동원된 총 인원은 60만 명을 헤아린다. 화재가 진압된 5월 6일부터 방사능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고 원자로를 콘크리트 관으로 밀 봉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해체 작업자의 주요 임무 중 하나였다. 석관 봉인을 위해 사고 원자로 주변을 청소하는 일은 흠뻑러진 극단적 수치의 방사능 덩 어리로 인해 투입된 로봇의 기기 고장을 유발할 지경이었다. 로봇도 감당 못한 이 작업에 어린 병사들, 즉 ‘바이오로봇’이 동원되었다. 이 세 피해 그룹 중 급성 방사 성 증후군으로 단기간 내 사망한 사람의 수는 31명이지만,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결과가 드러나는 방사성 장애의 특성상 60만 명의 해체 작업자, 그중 특히 사건 직 후인 1986~1987년에 동원된 약 35만 명 중 직간접적 방사성 장애나 연관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는 통계에 따라 2만 5000~10만 명 사이를 헤아린다. 조국을 위해 몸을 던진 평균 33세의 젊고 건강한 해체 작업자들 중 약 7~30%가 50세를 전후해 사망한 셈이다.

4. 재후(災後) 국가 건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체르노빌 사고를 지구화 시대 복합 재난의 기원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는 여 러 가지다. 가장 단순하게는 복합 재난의 정의에 비추어, 그것이 원자로 폭발과 대 형 화재, 방사능 오염 등 여러 종류의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착종된 형태라는 점 이다.

두 번째는 체르노빌 사고가 ‘정치적 체르노빌’이라 할 소련의 붕괴를 촉발한 중 요한 팩터가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복합 재난이 전면화되는 조건, 즉 전 지구화로의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야기했다는 점이다. 이는 “체르노빌은 소련 체제의 상징이 고, 체르노빌에서 일어난 기술 재앙은 정치적 재앙의 전조가 되었다”는 러시아에 널리 퍼진 견해가 잘 보여 준다.

실제 사고의 근본 원인 중 하나였던 안전 문화 부재는 소련식 관료주의로부터 배양된 것이며, 소련식 비밀주의는 사고 피해를 키우고 복구를 심각하게 방해했다. 실제 무지막지한 방사능 누출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 주민 소개가 이루어진 것은 사고 발생 후 하루가 지난 4월 27일로, 이미 다수의 주민들이 다량의 고농도 방사

성 물질에 장시간 노출된 후였다. 또 사고 직후 방사능 수치의 비정상적인 증가에 놀란 스웨덴 등 유럽 국가의 추궁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사고 발생을 시인한 것은 이들이 지나서였고, 당국의 공식 발표가 이루어진 것도 무려 3주가 흐른 뒤였다. 이후에도 소련 정부는 사고 규모 및 오염 정도를 축소, 은폐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제 공조를 지연시켰다.

이렇게 체르노빌 사고로 여실히 드러난 소련의 관료주의와 비밀주의의 병폐는, 한편으로는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고의 직접적 피해국이자 소연방의 핵심 구성국이던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의 분리 독립 요구에 강력한 논거를 제공했다. 또 필자도 지적하고 있듯이, 체르노빌 사태 수습에 ‘소련의 1년 국가 예산’이 소요되어, 그 경제적 부담 역시 소련 붕괴를 가속화한 한 요인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후 실제로 이루어진 소련 붕괴 및 체제 전환 과정에서 계속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혼란 역시 사후 대처와 복구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했으며, 이렇게 체르노빌 사고의 전후 과정은 기술 재난과 인적·사회적 재난이 여러 차원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상의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소련 역시 체르노빌이라는 대참사 이후 새로운 국가 건설의 필요성이 더욱 강력히 제기되고, 그 ‘우발적 필연’에 힘입어 ‘소련 해체’와 자본주의 체제 이행이라는 전대미문의 대전환이 한층 가속화되었다. 이는 필자가 후쿠시마 이후 ‘재후 재팬’ 건설의 필연성이 제기되고, 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초래된 것으로 파악한 현재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하지만 소련의 경우, 체르노빌로 촉발된 반핵, 탈핵의 문제의식은 이웃 유럽국가에서는 완전한 nuclear free(독일, 오스트리아)로 결실을 맺은 반면, 정작 러시아에서는 소련 해체라는 대격변 속에 묻혀 용해되어버렸다. 또 재난을 초래한 소련이라는 국가 시스템, 그 구조적 폭력에 대한 개선의지 역시 체제전환 이후의 소용돌이, 경제 불안, 이에 편승한 제국지향적 푸틴 정권의 등장과 그 위용 속에 실종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용융하는 원전국가’, 전후 일본을 지탱해온 시스템의 동요 속에서 한편으로는 자발적이고 다원적인 시민사회의 용기를, 다른 한편으로는 아베 정권이 표상하는 보수우경화 행보를 보이는 재후 재팬의 새로운 모습은 과연 어떤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 토론자의 질문은 이와 관련된다.

5. 질문들

1) 필자는 기지국가와 원전국가의 태생적 연루성을 말하고 있는데, 평화헌법 개정과 정상국가화를 통해 기지국가의 비정상성((대미)의존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아베정권의 시도가 원전국가적 정체성에는 어떤 방향 수정을 야기하지는 않는지 궁금하다. 기지국가가 원전국가의 정치적 표현이고, 원전국가가 기지국가의 경제적 표현이라면, 어느 하나의 변경은 다른 쪽의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지 않은지...

2) 재난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실을 안겨 주지만, 동시에 그 거대한 파국을 새로운 시작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역전시킬 가능성을 함께 부여한다. 이것이 바로 ‘재난의 정치적 가능성’이자, 재난 속에서 평화의 역설적 기원을 발견하고자 하는 ‘재난의 정치학’의 본질일 것이다. 3.11과 후쿠시마 이후, 원전에 대한 여론의 커다란 변화나, 다양한 형태의 시민운동의 발흥은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 하지만 왜 이런 흐름은 아베 정권의 보수우경화에 대비되는 가시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와 공생하는가.

3) 필자는 시민운동이 원전과 기지의 연루성을 자각하기 시작해, 반핵/탈핵의 아젠다가 기지화에 대한 이의제기와 중첩되기 시작했다고 논문에서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풀뿌리 평화시민운동은 후쿠시마 사태를 전후 일본의 국가정체성, 사회적 모순이나 폭력의 맥락 속에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2012년 17만 명이 모인 사요나라 원전 집회와 2015년 대규모 안보법제 반대 투쟁의 주체가 겹친다고 보아도 무방한 것인가.

4) 일본 시민들은 체르노빌과 그것이 당시 소련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사실 후쿠시마 사고는 히로세 다카시가 체르노빌 참사 1년 후 펴낸 <위험한 이야기>에서 이미 예견한 바 있다. 그는 세계1위 원전국가인 미국에서 스리마일 사건이, 2위 소련에서 체르노빌 사건이 일어났다면, 다음은 3,4위인 프랑스나 일본 차례일 거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그는 그렇게 많은 원전을 가진 나라 중 일본만큼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대진재와 원전사고가 결합된 후쿠시마 사고를 소름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한 셈이다. 실제 논문에서 3.11 재난의 ‘사건성’을 서술하는 논문의 도입부에서 묘사된 일본인의 반응, 즉 “어떠한 이해와 판단도 불가능한 사태가 일어났다”, “인류가 아직 경험한

적이 없는 규모의 원전사고” 등은 이미 체르노빌을 통해 인류가 학습한 바 있다. 체르노빌 사태에 한국이 얼마나 안이하게 대응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만, 안전신화 강국인 일본에서조차 체르노빌에 대한 학습이 부재했다는 사실은 놀랍다. ¹⁹

토론 4

“탈원전 지속가능발전모델은 가능한가?” 토론문

세션 2 한중일 원전과 탈원전 발전모델 토론문

한 재 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일본의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대만을 제외하고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 등 동북아 삼국 모두에서 핵발전 (확대)정책은 결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심지어 후쿠시마 핵사고를 경험한 일본까지도 다시 일부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는 유럽과 미국 등의 선진국가들에서 핵발전 정책을 위축되고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과 대비된다. 김혜정 선생님은 이런 상황을 지적하면서 동북아 지역 주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전세계인 탈핵을 위해서라도 동북아 지역, 한중일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혹은 벌어져야 할) 탈핵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의한다.

한편 김혜정 선생님은 탈핵이 핵사고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당위론에 입각하는 것만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였다. 즉 핵발전소를 포기하였을 경우, 그것으로부터 얻고 있었던 전력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나아가 김혜정 선생님의 발표문은 한 국가의 탈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이용을 증대시키면서 핵발전소의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을 경험적으

로 설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탈핵을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역시도 동의한다.

김혜정 선생님의 발표문에 대부분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주어진 주제인 “탈원전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은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해보고자 몇 가지 토론을 해보겠다.

첫째, ‘탈원전 지속가능한 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토론해보겠다. 전력원으로서 핵발전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으며 (급속한 방식이든 아니면 점진적인 방식으로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전력 시스템을 구축이용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해볼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이 워낙 그 실체가 모호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런 정의만으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수용하기로 하자). 이런 ‘탈원전 지속가능한 발전’은 에너지기후변화 운동 및 정책 분야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에너지전환(Energy transition(영); Energiewende(독))’로 다시 표현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에너지전환은 다차원성을 가진다. 가장 두드러지는 차원은 에너지를 바꾸는 것이다. 핵에너지가 가진 환경적·보건적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포기하고 다른 에너지원(주로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자는 뜻으로 에너지전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은 에너지원의 교체/변화는 에너지전환의 여러 차원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에너지전환은 “①에너지원의 변화뿐만 아니라, ②에너지 이용의 의미 변화(‘에너지 공급’에서 ‘에너지 서비스의 제공’으로 변화), ③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지역(공간)적 배치의 변화, ④에너지 생산·공급·배분 시설의 소유·운영·관리 주체의 변화, 그리고 ⑤에너지 이용자의 행동과 규범의 변화”(한재각, 2016)을 포함한다. 이런 다차원성은 에너지전환이 에너지 시스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이런 다차원성을 포괄하는 에너지전환을 추구할 경우, 그런 사회의 모습은 지금의 한국과 크게 다를 것이다. 상상은 여러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토론자의 상상력에 기대에 몇가지 그림을 그려보겠다. 우선,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가 축소·폐쇄되는 한편, 태양광, 풍력, 가스복합발전 등이 더 우세한 발전설비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금보다 에너지 이용은 더 비싼 비용을 지불

해야 하는 행위가 될 것이, 이와 병행하여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제품들이나 서비스도 훨씬 비싸질 것이다. 지역에서 생산되고 소비하는 것이 국제 무역을 통해서 공급되는 제품과 서비스보다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지구적 무역체계의 연결은 심화되기보다는 완화될 것이다. 한전과 같은 국가 독점적인 기업에 의해서 전력을 생산·송배전·판매되기보다는 광역(혹은 권역) 단위의 에너지 공기업들이 에너지 협동조합 등과 함께 전력을 생산·송배전·판매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만큼이나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고 효율화하도록 돕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할 것이다. 이런 지역 분산적인 에너지 시스템은 지역분권·지역자치를 중심으로 사회의 재구조화와 친화성을 가질 것이다.

둘째, 중국의 경제성장과 동북아의 탈핵 문제와 어떻게 연관될 것인지 생각해보자. 중국이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게 된다면,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버리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전력개발에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 게다가 기후변화 파리협약 등에 의해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도 강요받고 있다. 게다가 북경 등에서 나타나는 엄청난 스모그 등의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내의 한계치도 이제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하는데, 그 대안으로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이외에도 핵발전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핵발전 중단을 결정, 고려하는 국가들이 급속한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저성장 기조에 들어선 국가라는 점을 기억해보면, 중국의 핵정책이 변화할 수 있는 구조적 가능성은 낮다. 게다가 중국 내에서 반핵운동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사실 동북아의 탈핵화는 중국의 존재 때문에 극히 비관적이다. 다만, 최근에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난 시기와 달리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중국 그리고 주변국/세계 탈핵운동에게는 그나마 희소식이 될 것이다. 어쨌거나 중국은 세계(혹은 동북아) 탈핵운동에 있어서 커다란 암흑사자(black box)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셋째, 다들 동의하겠지만 북한 체제의 유지 문제와 핵문제는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여기서 핵문제는 체제 생존의 운명을 건 핵무기 개발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북한의 사회경제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는 전력(나아가 에너지)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간주되는 핵발전 개발의 측면에서도 그렇다. 북한-미국-남한 간에 이루어졌던—지금은 실패로 끝난—KEDO와 같은 핵발전소 건설 지원 사업이 후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시도가 될 것이다. 여기서 북한의 에너지전환에 대해서도 함

게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통일”이 될 북한 사회는 어떤 에너지체제를 가질 것인가, 그것은 남한의 에너지체제와 어떻게 조화될 것인가? 가정법이지만, 탈핵을 지향하는 남한과 핵발전을 추구하는 북한의 “통일”은 가능할까? 북한도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려는 전세계적인 흐름에 고립되어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법제도와 기구를 만들고 있고, 해외(특히, 유럽)과 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기존의 에너지시스템이 핵발전이나 대규모 석탄화력과 같은 경성에너지 시스템으로 고착(lock-in)된 정도가 낮다고 이해되며,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남한보다 수월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통일”된 남북한 에너지시스템의 속성이 무엇이어야 할지도 조금씩 토론을 시작해가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P